

KOTRA 인도비즈니스뉴스매거진(2025.4월)

주요 내용

- ❶ **이달의 주요기사** (일간지 주요기사 요약) / 1
 - ❶ 트럼프 관세조치 영향 / 1
 - ❷ 경제 동향 및 전망 / 15
 - ❸ 산업별 주요 뉴스 / 22
 - 자동차 · 부품 / 22
 - 통신 · 스마트폰 / 28
 - 조선업 / 33
 - 소비재 / 34
 - 철강 / 35
 - 반도체 · AI / 39
 - IT · 전자 / 46
 - 의약품 / 47
 - 재생에너지·그린수소 / 49
 - 기타 / 51
 - ❹ 외국인투자유치 / 53
 - ❺ 세제 및 규제 변화 / 56
 - ❻ 무역협상 · 대외관계 / 62
 - ❼ 지재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도 IP 센터 제공) / 65
- ❷ **이슈 포커스** (글로벌 경제외교 전문지 인도 경제 테마 기사 요약) / 66
- ❸ **시장트렌드** (인도시장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안내) / 71
- ❹ **주요 경제지표** / 72

※ 문의처: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jeongsunny@kotra.or.kr)

뉴스매거진 이메일링 서비스 신청 링크: <https://forms.gle/MHUiYMtF85A6cZsw8>

1 이달의 주요기사

트럼프 관세조치 영향

< 美 기업요구사항과 인도 산업 내 파급영향 전망 >

○ 美 기업들, 트럼프 對인도 관세 공세에 가세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서비스산업연합(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 CSI), 할리 데이비슨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협회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인도를 압박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및 규제 장벽을 낮추도록 요청했음.

이러한 요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보복 관세 조치를 앞두고 무역 파트너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음.

USCC는 인도의 의약품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함. 또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의 이중화(dual-location manufacturing) 조항을 포함한 잠재적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함. USCC는 인도 정부가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NLEM)'을 통해 특허 의약품과 스텐트, 무릎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윤 제한 정책이 의약품 분야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인도 내 위조 의약품 문제도 함께 제기했음. 아울러 CT 스캐너나 고급 외과 수술 장비 등 재제조·중고 의료기기의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

USCC는 무알콜 탄산음료에 대해 죄악/불이익 품목으로 분류하여 28%의 GST(상품서비스세)를 부과하는 인도의 정책이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율 인하를 요청함. 이 밖에도 USCC는 인도의 엄격한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을 지적하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의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양국 정부에 공공조달시장에 상호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조달협정 체결을 촉구했음. USCC는 향후 무역협정에 인도의 국영기업(SOE) 부문 추가 개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할리데이비슨은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해 EU는 68%, 브라질은 18%, 태국은 60%, 인도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균형을 지적했음

CSI는 제출 의견서를 통해 구글,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 회원사들이 인도에서 점차 강화되는 무역 및 투자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CSI는 인도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디지털 보호 무역 정책(digital protectionist policies)이 미국 서비스 산업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고 밝혔음.

CSI는 특히 현지 콘텐츠 의무화(local content requirement), 인도 통합결제시스템(UPI) 및 루페이(RuPay) 카드에 대한 특혜,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 통신 장비의 의무 시험 및 인증,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 IT 제품에 대한 관세 등의 문제를 지적했음.

독립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판매자들도 의견서를 통해 인도와 중국이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엄격한 세관 통제를 통해 미국의 소규모 판매자들의 수출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지적했음.

“인도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42%에서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난감 등 일부 품목은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수입품에도 상호보복 관세와 품질 통제가 적용돼야 함”이라고 주장했음.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의류 분야에서 시장 접근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의류·신발협회는 인도가 인도 외 시장을 위한 신발 생산을 점점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표준국(BIS)이 최근 시행한 품질통제명령(QCO)은 각 공장별 인증, 제품 시험, 감사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발 한 켤레마다 BIS 인증 로고를 찍어야 하는 규정도 도입했음. 이러한 보호무역적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자료원: 'US firms join Trump's tariff salvo on India', BS(3.24)

○ **美, 인도에 자동차 수입 관세 철폐 요구**

미국이 인도와의 양자 무역 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는 즉각적인 관세 0%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단계적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양국 간 무역 협정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인도의 고율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이번 협상이 인도 진출을 준비 중인 테슬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율은 최대 110%에 달하며, 일론 머스크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며 비판해왔음.

머스크의 주장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함. 그는 화요일(3.4) 의회 연설에서 인도의 100% 이상 자동차 관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도 보복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함.

자료원: 'US Eyes Zero Duty on Cars as Tesla Entry Nears', ET(3.6)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도 공산품 수출에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수입 관세 조치가 인도의 공산품(엔지니어링제품) 수출에 이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FY25 전체 수출 실적이 당초 목표인 1,18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엔지니어링제품 수출업체들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으며, 3월에도 비슷한 감소폭이 예상됨. 이에 따라 FY25 전체 수출액은 약 1,1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1,090억 달러) 대비 6% 증가에 불과해, 당초 예상됐던 10%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

인도공학수출진흥위원회(EEPC) 회장 판카즈 차다(Pankaj Chadha)는 "2월부터 미국향 철강 관련 제품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3월 12일부터 미국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따른 선행 반응이다. 인도에서 미국까지 선박 운송에는 약 1.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2월에 선적된 제품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에는 이미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함.

차다 회장은 “매년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 공산품 규모는 약 200억 달러이며, 이 중 약 50억 달러 규모가 이번 25%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 제품에 상호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인도 공산품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음.

자료원: 'Ministries in a huddle as Trump sticks to Apr 2 reciprocal tariff levy', BL(3.21)

○ 무디스, 미국 관세가 남아시아·동남아 기업에 위험요소 될 것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위험 요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무디스(Moody's)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화학,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정책 변화로 인해 수요 감소 및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특히 인도는 IT 산업의 주요 인력 공급국으로, 2023년 발급된 H-1B 비자의 75%가 인도 국적자에게 돌아감.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타타 컨설팅 서비스(TCS), 인포시스(Infosys) 등 업계 선두 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무디스는 평가함.

반면, 광산, 석유 및 가스 업종의 기업들은 미국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은 미국 수출 비중이 낮더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참고로, 인도의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동남아시아 지역은 1% 수준에 불과함.

자료원: 'Services, Auto, Steel and Chemicals Cos Most Exposed: Moody's', ET(3.18)

○ S&P: 인도, 미 관세 영향 제한적이나 철강·화학 산업 타격 가능성

인도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로 인해 직접적인 관세 위험은 낮지만, 무역 전환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철강 및 화학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S&P Global Ratings가 밝힘.

S&P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인도의 대미 노출도는 4.5%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4.7%) 보다 낮음. 또한, 인도의 대미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S&P는 보고서(Tariff hit among Asia-Pacific firms)를 통해, 미국이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만큼 인도 역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함.

다만, 글로벌 성장 둔화 등 관세의 간접적 영향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이는 인도 수출 부문의 GDP 기여도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보고서는 또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인도 기업 대부분이 단기적인 수익 둔화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인프라 투자 및 소비 지출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함.

S&P는 FY25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전년(6.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여전히 아태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봄. FY27에는 성장률이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인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FY24 4.6%에서 FY25에는 4.4%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FY26에는 다시 4.6%로 반등할 것으로 보임. 물가 안정화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RBI)은 FY25 4분기에 정책금리를 75bp(0.75%포인트) 인하해 5.5%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S&P는 밝힘.

자료원: 'Low US Exposure Cuts Tariff Risks for India', ET(3.21)

○ 미국 상호 관세, 인도 자동차 산업 영향 미미.. 업계 '관망'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인도 자동차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현재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 극히 적기 때문임.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인도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의 개별 합의로 인도 관세가 조정될 경우, 한국,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산 자동차는 매우 적고, 미국산 자동차의 인도 수입도 거의 없다"고 설명함. "테슬라조차도 미국이 아닌 독일 공장에서 인도로 수출할 계획이므로, 이번 조치가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나 일본, 한국, 유럽의 OEM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자료원: 'Reciprocal tariffs may not hit automobile sector in a big way', BL(3.6)

<정부 대응>

○ 인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보복 조치' 계획 없어.. 양자 무역 협정 우선

피유시 고알 인도 상공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및 기타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할 계획이 없다고 소식통이 전함.

"현재 목표는 관세 면제 및 예외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힘.

정부 관계자는 "이 협정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만약 MFN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인도가 미국에 제공하는 관세 인하 혜택을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산업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인도는 연간 3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석유 및 방위 장비 구매 확대도 고려하고 있음.

자료원: 'India-US trade talks: Goyal may skip 'tit-for-tat' threats for now', BL(3.3)

○ 인도-미국 4월 2일 상호관세 위협 앞두고 협상 가속화

인도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세 인하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로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양국이 주요 시장 접근과 관련된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수요일(3.26),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미국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회의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번 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 관계자는 "양국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속히 인하할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 협상은 브렌던 린치 미 무역대표부(USTR) 남·중아시아 담당 부대표와 Rajesh Agarwal 인도 상무부 Additional Secretary이 주도하고 있으며, 핵심 분야에서의 신속한 성과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국은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 및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인도 상무부는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미국 측 요구에 따라 관세 인하가 가능한 품목 목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일부 품목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민감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업재 분야에서는 화학, 섬유, 공학 제품 및 오토바이 등의 품목에서 미국산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자동차의 경우, 인도는 단계적인 관세 인하 계획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짐.

반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관계자는 "인도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퀴노아, 사과 및オート밀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밀, 옥수수 및 유제품과 같은 민감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자료원: 'US-India 'fast-track' talks on tariff cuts, parleys begin in Delhi', BL(3.27)

○ 인도-미국 양자무역협정(BTA), 관세 협상에 집중해야.. 광범위한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

인도와 미국 간 진행 중인 양자무역협정(BTA) 협상은 관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협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식재산권(IPR),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보호, 정부 조달 등 인도가 정책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해 온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사회개발위원회(CSD) 석좌교수인 Biswajit Dhar는 "핵심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양보할 것인가"라며, 관세를 넘어선 논의가 진행될 경우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함.

실제로 인도는 IPR, 데이터 보호, 정부 조달, 노동 문제 등에서 주권적 정책 결정권을 유지해 왔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관련 분야의 의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왔음.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는 IPR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 특히 인도 특허법 3(d) 조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에버그리닝(Evergreening of Patents)'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음.

또한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도 인도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 권한을 유지하려 하며, 정부 조달 역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임. 이는 중소기업(MSME)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임.

자료원: 'Proposed India-US trade pact must not go beyond tariffs, say experts', BL(3.17)

○ 인도, 무역 균형 맞추기 위해 대미 수입 확대 검토

인도가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해 일부 제품의 조달을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터키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던 사과와 중국산 고급 섬유류의 조달을 줄이고, 미국에서 이를 공급받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밝힘. 2024년 4월~12월 인도는 총 3억 75만 달러 규모의 사과를 수입했으며, 이 중 터키산이 6,529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한 섬유 업계 관계자는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강도 및 특수 섬유류가 있다. 현재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함.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함. 또한, 기계 및 공학 제품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됨.

자료원: 'India Looks to Shift Sourcing of Synthetic Fibre & Apples to US', ET(3.19)

○ 인도, '구글세' 철폐 추진.. 미국과 무역 협상 고려한 결정

인도 정부가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부과하던 6%의 균등화 부담금(일명 '구글세')을 4월 1일부터 폐지할 계획임. 이는 4월 2일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인도는 FY17에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해 6% 균등화 부담금을 도입했으며, 2020년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2% 부담금을 추가 도입하여 범위를 확대함. 이 2% 부담금(일명 구글세)은 2024년 8월 1일 폐지되었으나,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한 6% 균등화 부담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월요일(3.24) 국회에서 제출한 재정법 개정안 59개 조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계 투자펀드의 인도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서 '간접적으로(indirectly)'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됨. 간접지분 또는 연결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임. 이전에는 인도인이 5% 이상 출자한 경우 해당 펀드가 인도 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펀드매니저들의 인도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오프쇼어 펀드의 인도 유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균등화 부담금 철폐 결정은 인도와 미국 간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인도가 4월 2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 이에 따라, 균등화 부담금을 대가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득세법상 적용받던 일부 면세 조항도 폐지될 전망이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디지털세 폐지를 검토 중임.

자료원: 'In Reboot, India Ready to Press Delete on Google Tax', ET(3.25)

○ 인도-미국 양자 무역 협정(BTA), 1차 협상 관세 인하에 초점

인도와 미국 간의 첫 번째 양자 무역 협정(BTA) 단계는 주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인도는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 및 규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Brendan Lynch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단장은 오늘(3.25)부터 3일간 뉴델리를 방문해 무역 협정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무역 협정이 두 단계에 걸쳐 체결될 가능성이 크며, 1단계 협상에서는 양국 간 상품 무역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다만 협상의 구체적인 방향은 이번 주 말까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양국은 Lynch 부단장의 방문 기간 동안 BTA의 구조와 협상 일정, 협정의 기본 원칙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협상의 목표는 2025년 가을까지 마무리하는 것임. 1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을 다룬 뒤, 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주 진행될 협상이 공식적인 첫 번째 협상 라운드는 아니라고 관계자는 밝힘.

미국은 특정 산업재, 자동차, 와인, 농산물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해 옴. 반면, 인도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부문의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과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인도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인도의 농업 및 낙농업은 광범위한 인구가 생계를 의존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임.

자료원: 'Ministries in a huddle as Trump sticks to Apr 2 reciprocal tariff levy', BL(3.21)

○ 인도, 미국 상호 관세 일부 면제 기대.. 협상 결과 주목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인도가 부분적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이번 주 브렌던 린치 미 무역대표부(USTR)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의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상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도가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고함. 한 무역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는 4월 2일 시행 예정인 상호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는 지난달 미국이 인도와의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 해당 전문가는 "이번 주 미국 대표단과의 생산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측의 유연성이 감지되는 만큼 관세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한편, FY24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775억 1천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421억 9천만 달러로,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는 350억 달러에 달함.

자료원: 'India's hopes up as US hints at flexibility over tariff levy', BL(3.26)

○ 인도, 대미 무역 협상서 230억 달러 규모 관세 인하 검토

인도 정부가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1단계에서 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힘.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대응임.

뉴델리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인도의 대미 수출 총액 660억 달러 중 약 87%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함. 현재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에서 3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전체 수입품 중 55%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일부 품목에 대해 '대폭적인' 인하를 추진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면, 인도의 대미 수출품 중 진주(pearl), 광물 연료(mineral fuels), 기계(machinery), 보일러(boilers), 전기 장비(electrical equipment)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6~1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India may cut duty on 55% of its US imports', BS(3.26)

< 기업별/업종별 대응 >

○ 애플, 인도 생산 확대 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 美 관세 정책 변화가 변수

4년간의 급속한 확장을 거친 애플이 인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아이폰 수출과 국내 판매가 급증하며, 애플의 중국 생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FY25까지 인도가 아이폰 생산 가치의 15%를 차지할 전망으로, 당초 FY26 목표였던 10%를 훨씬 앞당겨 이미 12%를 달성함.

그러나 새로운 도전 과제도 등장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미국 수출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은 애플의 최대 시장인 만큼,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애플의 생산 이전 전략과 인도 시장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애플은 인도 정부가 2021년 도입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힘. FY25 10개월 동안(2024년 4월~2025년 1월) 인도에서 수출된 아이폰의 출하가 FOB 기준 1조 루피(약 114억 달러)를 넘어섬. 단일 회계연도 기준 처음으로 달성한 기록임. 이 덕분에 스마트폰은 FY25 4월~11월 기간 동안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항공 터빈 연료를 제치고 자동차용 디젤 연료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함.

애플은 인도 내수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2020년까지 소수의 소비자만 찾던 브랜드였지만, FY24 기준 매출이 35% 급증하며 6,700억 루피(약 7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 이에 따라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상위 5개 브랜드에 진입했으며,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평균 판매 가격(ASP)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핵심 관건은 애플이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JP모건에 따르면, 애플은 FY26까지 아이폰 생산의 25%를 인도로 이전할 전망이다. FY27에는 생산 가치 기준 2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 규모는 3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내수 시장에서도 애플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4년 7% 수준인

인도 내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2026년에는 10~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성장세는 인도에서 조립된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 16e 같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위험도 있음. 현재 인도는 스마트폰 수입에 16.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도의 스마트폰 관세가 없음. 만약 미국이 인도산 스마트폰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애플의 인도 생산 및 수출 전략이 흔들릴 수 있음.

자료원: 'Applecart upset as US tariffs bite', BS(3.3)

○ 미·중 무역전쟁 여파.. 글로벌 전자기업들, 인도 생산 이전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특히, 인도가 새로운 대체 생산 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인도의 한 주요 전자기기 위탁생산(EMS) 업체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의 주문량이 이번 회계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고 전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의 ODM 업체들을 통해 인도로 제조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봄.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10%에서 20%로 대폭 인상된 추가 관세를 중국산 스마트폰,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하기로 함.

시장조사업체 Omdia에 따르면, 인도는 삼성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약 23%(4,200만 대)를 차지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 중국 내 자체 공장을 폐쇄한 이후, 글로벌 시장용 저가형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 ODM 업체들에 위탁해왔음. 현재 삼성은 미국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로 일부 생산량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가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인도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중국은 여전히 생산 인프라의 규모와 정밀도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Omdia의 Jusy Hong은 "삼성의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상당수는 중국 ODM 업체를 통해 생산되며, 일부는 해외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국 ODM 업체들이 인도를 포함한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인도 내 생산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삼성에는 2024년 ODM을 통해 약 6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으며, Huaqin과 Wingtech이 각각 40%, Longcheer가 20%의 비중을 차지함. 이들 ODM 업체들은 이미 인도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현지 계약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을 시작한 상태임.

인도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위탁생산업체 Dixon Technologies는 중국 최대 ODM 업체 중 하나인 롱치어와 협력해 Oppo와 Realme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음. 또한, Huaqin은 Bhagwati Products, Micromax와 협력해 기존에 Vivo가 사용했던 생산 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현재 이 JV는 Vivo와 Oppo의 저가형 모델을 제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삼성의 일부 모델도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Handset Cos May Dial Up India Play to Ease China Pain', ET(3.5)

○ **트럼프, 고율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촉발.. 인도 엔지니어링 수출업계 긴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인도 수출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 미국은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4월 2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트럼프는 인도의 "매우 높은 관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브라질과 EU 등 일부 국가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인도 엔지니어링수출협회(EEPC) Pankaj Chadha 회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인도 역시 같은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는 보복 관세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EPC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경우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엔지니어링 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철강 제품, 전기 및 산업용 기계, 자동차 및 공항 관련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

인도 정부 역시 미국의 구체적인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H.D. Kumaraswamy 철강·중공업부 장관은 "미국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지 명확하지 않다. 인도는 현재 '관망'하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Trump tariffs trigger retaliation from China, Canada; India readies strategy', BL(3.5)

○ **미국, 인도산 제품에 상호 관세 예고.. 전자·보석·의류 업계 대응 박차**

미국이 인도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인도의 소비자 전자제품, 보석, 의류 업계가 미국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함.

인도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ixon Technologies는 미국 수출 고객사 및 해외 파트너사들과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Dixon의 앵커 고객 중 하나는 올해 미국으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Atul Lall 대표는 "미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는 관심이 매우 크다"고 밝힘.

GJEPC(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도 미국 고객 신뢰 확보 및 향후 전략 논의를 위해 3월 15일 미국 출장단을 파견할 예정임. 출장단은 De Beers Group, Tiffany & Company 등 주요 보석 브랜드 및 IDMA, NDC, DMIA 등 업계 대표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임.

미국 시장에서 인도는 다이아몬드 연마·가공뿐만 아니라 금 및 기타 소재로 제작된 보석류도 공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인도는 미국 보석·보석류 총 수입(891억 2천만 달러)의 12.99%인 115억 8천만 달러를 차지함.

의류업계도 미국 고객사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 최대 의류 수출업체 중 하나인 Gokaldas Exports는 미국 수출을 위해 케냐 공장을 활용할 계획임. 케냐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미국으로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현재 미국은 인도산 의류에 대해 11~28%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S. Ganapathi 회장은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AGOA의 무관세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그는 “만약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이 무관세를 유지하는 아프리카가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Auto, Electronics, Apparel, Jewellery Cos Work Around Reciprocal US Tariffs’, ET(3.7)

○ 인도 자동차 부품업체, 미국 시장 수출 전략 재정비.. 트럼프 관세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면서, 인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전략 마련에 나섬.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를 경유해 부품을 선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은 인도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전체 해외 출하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FY24 기준, 인도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5% 증가한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함. 같은 기간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인도 수입액은 1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며, 미국은 인도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인도는 수입 자동차 부품에 평균 7~8%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자료원: ‘Automobile Parts Cos Look to Tap Unaffected Countries’, ET(3.7)

○ 인도 전자 제조업, 미국 상호관세 압박 가중시, 베트남, 대만으로 생산기지 이전 우려

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의 전자 제조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대만이나 베트남 등 더 유리한 국가로 옮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 전자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함. 한 업계 관계자는 “상호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의 전자 제조업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에서 다른 유리한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액은 FY24 기준 897억 달러에 달함. 특히, 미국산 반도체(프로세서, 컨트롤러, 증폭기, 메모리, 논리 회로 등) 수입액은 FY24년 1억 545만 달러에서 FY25 4월~11월 5억 521만 달러로 급증함.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현재 인도의 대미(對美) 수출 품목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휴대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정책의 성과로 이어짐. ICEA는 “PLI 정책 덕분에 인도는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탈피하는 전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가장 큰 우려는 애플과 삼성의 주요 공급업체인 딕슨(Dixon),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등임. 이들 기업은 이미 인도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면 인도에서 제조한 제품이 대만이나 베트남 등 우호적인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함.

ICEA는 미국과 인도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자 무역 협정(BTA)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ICEA의 Pankaj Mohindroo 회장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컬러 TV, 가전제품 및 조명 분야에서 상호 무관세를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다"라며, "인도는 이미 일본, 한국, 아세안(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대미 전자제품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이며, 이 중 56%가 스마트폰임. FY25 들어 이 비율은 62%까지 증가함.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규모가 2030년까지 800% 증가해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현재 인도는 노트북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는 문제가 없으나,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통신 장비 부문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면서 중국의 대미 전자제품 직접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대만,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여전히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비해 인도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중국 소유 구조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자료원: 'US tariffs may force electronic vendors to shift base to other nations', BL(3.10)

○ **美 보복 관세 앞둔 인도 수출업계, 항공 운송 급증**

인도의 전자제품, 의류, 신발 수출업체들이 오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 보복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항공 운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반면, 해상 운송을 통한 무역은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함.

통상적으로 항공 운송 비용은 해상 운송보다 7~8배 비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기업들은 높은 물류비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을 선택하고 있음.

Ajay Sahai 인도수출기구연맹(FIEO) 사무총장은 "수출업체들이 항공 운송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면서도, 이는 스마트폰, 전자제품, 보석류, 스포츠 신발 및 일부 의류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는 "주문량 자체는 여전히 강한 편이지만, 해상 운송을 통한 출하량이 낮아지고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컨테이너 해운업계는 수출업체들이 연간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함. 일부 수출업체들은 인도와 미국 간 양자 무역 협정(BTA)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원: 'Exporters Take Wind Out of Shippers' Sails', ET(3.17)

○ **인도 의류업계, 美 대중국 관세 기회로 생산 확대.. 글로벌 주문 증가 기대**

인도의 의류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를 기회로 삼아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주문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불안과 치안 문제로 인해 글로벌 브

랜드들이 인도를 대안으로 선택하며 조달을 확대하는 추세임.

인도 최대 의류 수출 허브인 타밀나두주 Tiruppur의 제조업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함. Tiruppur에는 약 2만 8,000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니트, 염색, 표백, 인쇄, 자수 등의 공정을 수행하며 약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인도 니트웨어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이 클러스터는 최근 미국의 GAP, Carter's, Target, Walmart, 유럽의 Next, Duns, 호주의 Woolworths 등 글로벌 브랜드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음.

ICC National Textile Committee 회장인 Sanjay Jain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캐주얼웨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을 월 250만 개에서 350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West Bengal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임. 해당 공장은 오는 7~8월경 완공될 예정임.

트럼프는 지난주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월 4일부터 부과하고, 같은 날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10%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업계는 FY26까지 10~15%의 수출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음.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도의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함.

현재 중국은 미국의 의류·섬유 제품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1~11월 동안 미국의 중국산 의류·섬유 수입액은 991억 2,500만 달러에 달함.

자료원: 'Stars & Stripes Made to Order', ET(3.4)

○ 인도 보석업계, 온라인 판매 강화로 미국 수출 확대 모색

인도의 보석 수출업체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해 미국 시장 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 관세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임.

미국은 800달러 이하의 보석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간소한 세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된 후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됨.

Sabyasachi Ray 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GJEPC) 전무이사는 "이 같은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에 대해 미국은 이미 중국산을 대상으로 면제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다"고 밝힘. 그는 "업계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JEPC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보석 시장 규모는 2025년 66억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2025~2029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3.9%로, 2029년까지 77억 1,49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Kirit Bhansali GJEPC 회장은 "다자간 무역에서 양자간 무역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소액면세' 원칙은 인도 보석·귀금속 수출업체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70~80%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200달러 이하로 이뤄지는 만큼, 물류 비용이 낮은 보석·귀금속 제품과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함.

자료원: 'Jewellery Exporters Step Up Online Play to Reach US Buyers Directly', ET(3.12)

○ 인도 태양광부품 제조기업협회(ISMA), 인도 정부에 미·인도 태양광 부품 무관세 거래 요청

인도 태양광부품 제조기업협회(ISMA)가 정부에 미국과의 태양광 부품 무관세 거래를 추진할 것을 공식 요청함. 협회는 3월 24일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태양광 부품의 무관세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함. 또한, 미국산 태양광 제조 장비 및 자본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과 인도 내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요청함.

현재 인도는 태양광 셀 수입에 27.5%, 모듈 수입에 4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개발업체가 특정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및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승인 목록(Approved List of Models and Manufacturers, ALMM)' 규정을 적용 중이며, 태양광 셀에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한편, FY24 동안 인도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Solar Cos Urge Govt to Push for Zero-duty Trade with US', ET(3.26)

② 경제 동향 및 전망

< 주요 경제지표 >

◦ 인도 2월 제조업 둔화.. PMI 하락에도 고용 증가 지속

인도의 제조업 활동이 2월 다소 둔화되며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6.3으로 하락함. 이는 1월의 57.7보다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에도 영향은 없었음.

PMI는 400개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자료원: 'PMI slips to 56.3 in February as manufacturing growth slows', BL(3.4)

◦ 인도 서비스업, 2월 PMI 59 기록

강한 전방위적 수요에 힘입어 인도 서비스업 활동이 2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P는 수요일(3.5) 발표에서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9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고용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HSBC 인도 수석이코노미스트 P Bhandari는 "지난 6개월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글로벌 수요가 인도 서비스업 생산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함.

1월 PMI는 56.5였으며, 이번 상승은 해외 신규 수출 주문 증가 지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자료원: 'Services PMI rises to 59 in Feb', BL(3.6)

◦ 2월 WPI 2.4%로 소폭 상승

정부가 월요일(3.17)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도매물가상승률(WPI)을 기준으로 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 소폭 올라 2.4%를 기록함. 이는 1월의 2.3%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임.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2025년 2월의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주요 요인은 식료품 제조, 식품 원재료, 기타 제조업, 비식품 원재료, 섬유 제조업 등의 가격 상승"이라고 밝힘.

한편,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소매 물가상승률은 반대 흐름을 보이며 2월에 7개월 만에 최저치인 3.6%로 하락함.

자료원: 'Wholesale inflation rate rises to 2.4% in February', BL(3.18)

◦ 인도 2월 수출 10.9% 감소.. 20개월 만 최대 하락

인도의 2월 상품 수출액이 36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9% 감소함. 이는 지난 20개월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로,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임.

수입도 16.3% 줄어든 50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는 140억 달러로 축소됨. 이는 4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작년 2월(195억 1천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임.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감소가 전년도 높은 기저 효과(high base effect)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고 분석함.

자료원: 'Feb Trade Deficit at 3.5-year Low', ET(3.18)

○ 3월 인도 민간 부문 혼조세.. 제조업 성장 가속, 서비스업 둔화

인도의 민간 부문이 3월 들어 엇갈린 성과를 보였다고 월요일(3.24) 발표된 예비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가 밝힘. 제조업 부문은 성장 속도가 빨라졌지만, 서비스업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S&P 글로벌은 성명을 통해 HSBC의 예비 인도 제조업 PMI가 3월 57.6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함. 이는 2월 최종 지수인 56.3보다 높은 수치로, "운영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FY25 평균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함.

또한 지난달과 비교해 제조업 PMI의 5대 주요 하위 지수 중 생산(output), 신규 주문(new orders), 구매 재고(stocks of purchases) 등 3개 지수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원: 'Manufacturing growth picks up in March, services down: Flash PMI', BL(3.25)

○ 루피, 9거래일 연속 상승..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인도 루피화가 월요일(3.24)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거의 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외국계 은행들의 지속적인 달러 매도 영향으로, 2025년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손실을 만회한 결과임.

이날 루피는 달러당 85.49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전 거래일(85.98 루피) 대비 상승한 85.64루피로 마감함.

올해 3월 들어 루피는 현재까지 2.19% 상승하며 아시아 지역 통화 중 가장 강세를 보임. 다만, FY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61% 하락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0.03%의 미미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IFA Global의 CEO Abhishek Goenka는 "지속적인 외국 자금 유입과 회계연도 말 기업들의 해외 자금 송환 증가, 외국계 은행의 꾸준한 달러 매도가 루피 강세를 지지했다"고 설명함.

또한, 루피 강세 심리를 강화한 요인으로 인도 중앙은행(RBI)의 10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swap) 입찰에서 실제 입찰 금액이 두 배 이상 몰렸다는 점을 지목함.

RBI(인도중앙은행)는 이번 달러/루피 매수-매도 스와프 입찰에서 총 22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입찰을 접수받아, 목표 금액(100억 달러)을 크게 초과함.

자료원: "₹ nearly reverses 2025 decline vs \$", BS(3.25)

< 통화 정책 >

○ RBI, 4월 금리 인하 가능성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도 중앙은행(RBI)의 법적 치를 하회하면서, 오는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업 생산량 증가로 향후 식품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러한 기대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음.

이코노믹 타임스(ET)가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는 RBI가 4월 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하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6월 회의에서도 추가로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RBI는 지난 2월,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기준금리(레포금리)를 6.50%에서 6.25%로 조정한 바 있음.

자료원: '25 bps Rate Cut Seen in April on Cooling Inflation', ET(3.17)

○ RBI, Malhotra RBI 신임 총재 취임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지난해 12월 취임한 Sanjay Malhotra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경기 둔화와 은행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레포금리)를 25bp(0.25%) 인하했으며,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단행함.

Malhotra 총재가 부임할 당시 인도 경제는 '24년 7~9월 분기에 5.4% 성장하며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루피화 약세를 초래함.

RBI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지만, 그 결과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됨. 1월 말 기준, 은행권 유동성 부족 규모는 3조 루피(약 34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0년 4월 이후 최대 수준이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RBI는 △일일 변동금리 환매조건부채권 입찰 △공개시장조작(OMO) △달러/루피 스왑 경매 등을 시행함. 특히 2월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 Malhotra 총재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덜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Nomur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인도 경제가 여전히 경기 순환적 둔화 국면에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경고함.

자료원: 'RBI adopting more accommodative stance under Malhotra, says analysts', BS(3.3)

< 경제 전망 >

◦ IMF, 인도 경제 회복 전망.. 성장률 6.5% 유지 기대하지만 하방 위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 27일(목) 인도 경제가 최근의 둔화에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내 수요 회복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함.

IMF는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를 통해 “재정연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자본지출 확대와 농촌 수요 회복이 성장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FY25 성장률을 6.5%로 전망함. 이에 따라 생산 격차(output gap)가 대체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FY26에도 강한 국내 수요가 6.5% 성장률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중기적으로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과 일치할 것으로 전망됨.

IMF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FY25 4.8%, FY26 4.3% 수준으로 물가 안정 목표(4%)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인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함. 특히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예상보다 약할 경우, 정부의 자본지출 실행이 예산 목표를 크게 하회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지적함.

자료원: ‘IMF: India’s growth to accelerate in H2 FY25, domestic demand risks persist’, BL(2.28)

◦ S&P, FY26 인도 성장률 전망 6.5%로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FY26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6.7%에서 6.5%로 20bp(베이스 포인트) 하향 조정함.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서비스 중심 수출이 지속적으로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봄.

S&P는 이번 전망이 정상적인 몬순 시즌과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특히 원유)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보고서는 식품 물가 안정, FY26 예산안에서 발표된 세제 혜택, 낮아진 차입 비용이 인도의 소비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인도 중앙은행(RBI)이 현재의 금리 인하 주기에서 추가로 75~100bp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식품 물가 완화 및 원유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RBI의 목표치(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자료원: ‘S&P lowers India’s FY26 growth forecast to 6.5%’, BS(3.26)

◦ 인도 FY25 3분기 GDP 성장률 6.2%.. 세계은행, ‘Viksit Bharat’ 실현 위해 7.8% 필요

인도의 FY25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2%를 기록하며, 이전 분기(5.6%) 대비 가속화됨.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가 ‘Viksit Bharat’ 비전을 실현하고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24~2047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분석함.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Becoming a High-Income Economy in a Generation에 따르면, 2000~2019년 동안 인도는 연평균 6.7% 성장하며 주요 신흥 시장 및 대형 경제권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확장됨. 2020~2024년 평균 성장률은 5.4%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현재 인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40달러(2023년 기준)로, 세계은행 기준 중저소득국가(LMIC)로 분류됨. 보고서는 현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경우 2032년까지 1인당 GNI 4,516~14,005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중상소득국가(UMIC)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함.

세계은행은 인도가 성공적으로 고소득국가로 전환한 UMIC들과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함.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23년 기준 46.3%로, 2012년(56%) 대비 감소함.

연구개발(R&D) 및 혁신 역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인도의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13건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인 UMIC들은 평균 59건을 기록함. 산업 구조에서도 격차가 큼. 인도의 농업 및 연관 산업 비중은 16.8%로, 성공적인 UMIC들의 평균(3%)보다 현저히 높음. 2023~2024년 기준 농업 부문 고용 비중도 45% 이상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더딘 상황임.

그러나 보고서는 인도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성공적·정체된 UMIC들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인도의 GDP 성장률 변동성은 1.5로 성공적인 UMIC들보다 낮아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도 수입 대비 8개월치를 커버할 수 있어 UMIC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임.

대외부채는 GDP 대비 20.1%로 낮지만, 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됨.

자료원: 'India needs to innovate & reduce debt to become developed', BS(3.11)

○ OECD, 인도의 FY26 경제 성장률 전망 6.4%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FY26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9%에서 6.4%로 하향 조정함. 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수정 전망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6년 경제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OECD는 FY27 인도의 GDP 성장률 전망도 기존 6.8%에서 6.6%로 낮췄으며, FY25 성장률은 6.3%로 제시함. 이는 인도 통계청(NSO)의 예상치인 6.5%보다 낮은 수준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5년 2.2%, 2026년 1.6%로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 역시 2025년 4.8%, 2026년 4.4%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세 둔화를 보일 것으로 분석됨.

보고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일부 수출 시장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유치하며, 높은 관세 인상 영향 받는 국가들보다 비교적 나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함.

OECD는 인도의 경제 성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함. 2024년 4분기(10~12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한편, 인도의 2026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4.8%에서 4.5%로 소폭 하향 조정됐으며, 2027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0%에서 4.1%로 소폭 상향 조정됨.

자료원: 'OECD Lowers India's Growth Forecast for FY26 to 6.4%', ET(3.18)

< 기 타 >

○ 인도 해외 송금 구조 변화.. 미국이 UAE 제치고 최대 기여국으로 등극

인도 중앙은행(RBI)의 2023-24년 해외 송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급 기술을 갖춘 인도 이민자의 증가로 송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선진국에서 인도로 유입되는 송금 비율이 걸프 국가(GCC)를 넘어섰으며, 미국(27.7%)이 UAE(19.2%)를 제치고 가장 큰 송금 기여국으로 떠올랐음. 이는 2016-17년 조사 당시 UAE(26.9%)가 1위, 미국(22.9%)이 2위였던 것과 대조적임.

2023-24년 기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에서 보내온 송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반면,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송금 비중은 2016-17년 46.7%에서 2023-24년 37.9%로 감소함.

RBI는 "UAE는 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지만, 미국의 인도 이민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오는 송금이 더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 내 인도 이민자의 78%가 고소득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별 송금 수령 비중에서도 변화가 감지됨. 마하라슈트라가 20.5%를 기록하며 케랄라(2위, 18.7%)를 제치고 송금 수령 1위를 차지함. 타밀나두 역시 2016-17년 8%에서 2023-24년 10.4%로 증가하며 비중을 확대함.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글로벌 송금 점유율은 2001년 11%에서 2024년 14%로 상승함. 향후 2029년까지 인도에 유입되는 송금액이 1,600억 달러(약 21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US overtook UAE to become top remittance source in FY24: RBI survey', BL(3.20)

○ 거시경제 역풍으로 인해, 인도 IT 기업 FY26 성장에 영향 우려

FY25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인도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선택적 지출 축소와 지속되는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며, FY25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FY26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음. 애널리스트들은 FY25 4분기에는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고객 수요가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액센추어는 미국 및 금융 부문에서 선택적 지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BFSI(은행·금융·보험) 부문이 전체 매출의 25~40%를 차지하는 TCS, 인포시스, 위프로 등 인도 주요 IT 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한편, 맥쿼리(Macquarie)의 애널리스트 라비 메논(Ravi Menon)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

할 가능성은 주의 깊게 봐야 하나, 보통 경기침체는 기업들이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이는 오히려 아웃소싱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분석함.

자료원: 'Macro headwinds cloud IT firms' growth outlook', BS(3.24)

○ FY25 인도 M&A 거래 규모, 1,000억 달러에 근접

사모펀드(PE) 투자 확대에 힘입어, FY25 동안 인도의 인수합병(M&A)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999억 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전년도(FY24)의 790.5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투자자 심리 변화, 거래 구조의 진화,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FY26에도 M&A 활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FY25에는 지금까지 총 3,103건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이는 FY24의 2,598건보다 확연히 증가한 수치임. 올해 가장 큰 거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50.8억 달러 규모의 품질케어(Quality Care)와 아스터 DM 헬스케어(Aster DM Healthcare) 간의 합병이었음.

거래 건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 규모는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3년 전의 HDFC와 HDFC은행 간의 합병보다는 낮은 수준임.

법무법인 Khaitan & Co의 수석 파트너 바라트 아난드(Bharat Anand)는 “자본시장 둔화와 기업 가치의 합리화로 인해 M&A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치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 향후에는 수익 기반 보상(earn-out) 구조, 지급 유예형 거래, 주식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함.

자료원: 'M&A deals close in on \$100 bn in FY25', BS(3.24)

③ 산업별 주요 뉴스

자동차 · 부품

< 업계 동향 및 정부 정책 >

○ 인도 자동차 시장, 경기 둔화 속 위축.. 승용차·이륜차 판매 감소

약세장,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불확실성,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인도의 자동차 소매 판매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음.

2월 승용차(PV)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며, 이륜차(2W) 시장도 6% 줄어듦. 여기에 인도 증시(Dalal Street)의 폭락으로 인해 44조 루피(약 5,052억 달러)의 투자자 자산이 증발하면서 자동차 소매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월 전체 자동차 소매 판매는 7% 감소함. 부문별로 보면, 상용차(CV)는 9% 줄었으며, 트랙터는 15%, 삼륜차(3W)는 2% 감소함.

FADA의 C S Vigneshwar 회장은 "지난 5개월간 증시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감소했으며, 자동차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밝힘. 특히 승용차와 이륜차 시장에서 상담 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금융 접근성 문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자료원: 'Auto retail sales slide amid weak earnings', BS(3.7)

○ 인도 자동차 시장, 높은 재고 부담 속 할인 경쟁 심화 전망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는 내년 회계연도의 승용차 판매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이는 자동차 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현재 자동차 딜러들은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큼. FADA의 CEO Saharsh Damani는 "현재 자동차 재고는 약 50~52일 치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상적인 재고 수준은 21일이며, 30~35일을 초과하면 딜러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한다"고 설명함.

자료원: 'FADA sees slow recovery in PV sales in FY26', BL(3.12)

○ 인도, 전기차 산업 육성 강화.. 테슬라 진출 여부에 주목

Kumaraswamy 인도 연방 철강 및 중공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특히 테슬라의 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힘. 그는 또한 인도 전기차(EV) 시장이 보조금 없이도 2030년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임.

Q) 모디 총리는 '30년까지 EV 판매가 8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조금 없이도 가능할까?

지난 11년간 인도의 EV 판매량은 732배 증가했으며, 연평균성장률(CAGR)은 82%에 달했다. FY25 기준

EV 판매량은 168만 4,000대를 기록하며 이미 전년도 판매량을 초과했다. 이 같은 성장세를 고려할 때, 보조금 없이도 EV 판매량은 2030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중국, 베트남, 한국 기업들은 인도 EV 시장에 적극 투자 중인데, 테슬라는 왜 진출하지 않는가?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SPMEPCI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인도에서 전기 4륜차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최소 415억 루피(약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5년) 동안 완성차 수입 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수입 차량의 최소 수입비용(CIF)은 3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3차례의 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테슬라는 작년 4월 1차 협의에만 참관자로 참석한 후 추가 논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Q) 중공업부는 ACC 배터리 PLI(생산연계인센티브) 사업의 10GWh 용량 입찰을 준비 중이다. 진행 상황은?

중공업부는 그리드 규모 고정식 에너지 저장(Grid Scale Stationary Storage)을 위한 10GWh 추가 용량을 대상으로 한 3차 입찰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까지 글로벌 입찰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원: 'Govt committed to attracting global automakers', BL(2.24)

○ 인도 이륜차 업계, OBD II-B 규제 도입 앞두고 판매 감소

오는 4월 1일부터 OBD II-B 배기가스 규제가 인도 내 모든 이륜차에 적용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기존 재고 소진에 집중하면서 3월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이륜차 제조업체들의 도매 판매(딜러 출하량) 감소가 확인되고 있음.

주요 제조사 판매량 감소 현황:

Hero MotoCorp: 1월 4,12,378대 → 2월 3,57,296대 (M-o-M -13.35%)

Honda Motorcycle & Scooter India(HMSI): 1월 4,02,977대 → 2월 3,83,918대 (M-o-M -5%)

TVS Motor Company: 1월 2,93,860대 → 2월 2,67,502대 (M-o-M -6%)

Bajaj Auto: 1월 1,71,299대 → 2월 1,46,138대 (M-o-M -15%)

OBD II-B(On-Board Diagnostic-II B)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BS-VI 2단계(배출가스 기준)의 일부로 도입됨. 이 시스템은 차량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임.

업계 전문가들은 OBD 시스템 탑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이륜차 가격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일부 제조사들은 이미 OBD II-B 규정을 준수하는 모델을 출시한 상태임.

자료원: '2-W wholesales to drop in March as OEMs clear stocks ahead of OBD II-B norms', BL(3.4)

○ 마하라슈트라, 300만 루피 초과 전기차에 6% 세금 부과.. CNG 차량 세율도 인상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가 300만 루피(약 34,361달러)를 초과하는 전기차(EV)에 대해 6%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 대한 세금도 기존 1%에서 인상됨. 이번 조치는 월요일(3.10) 발표된 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CNG 차량 세금 인상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Devendra Fadnavis 마하라슈트라 주총리는 “고급 전기차(300만 루피 이상)에만 세금을 부과하며, 그 이하 가격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CNG 차량에 대한 세율 인상은 FY26에 약 15억 루피 (약 1,718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그러나 이번 정책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현재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2% 수준에 불과함.

자료원: 'Maharashtra imposes 6% tax on EVs above ₹30 lakh', BL(3.11)

◦ FY26 중고차가 신차 판매 앞지를 가능성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FY26에는 중고차 판매가 신차 판매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의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인도의 중고차 시장은 지난 23년간 연평균 10~1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5~26년에는 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스피니(Spinny) 창립자 겸 CEO인 니라지 싱(Niraj Singh)은 판매량 기준으로 약 657만 대의 중고차가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음. 같은 기간 인도의 신차 시장은 약 43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 이 같은 중고차 시장의 성장은 타이어, 자동차 금융 등 관련 산업에도 확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신차 시장은 FY24에 420만 대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정체 상태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됨.

FY26에는 신차 판매가 12% 증가해 약 454~4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중고차 시장은 방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푸네 등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싱은 향후 7~8년간 중고차 시장이 연평균 12~1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참고로, 현재 인도의 승용차 보유율은 인구 1,000명당 34대 수준임. 반면 유럽은 2022년 기준 560대, 미국은 850대로 훨씬 높음.

자료원: 'Used car sales may race past new cars in FY26', BS(3.24)

◦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 1,000억 달러 수출 목표 설정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이 향후 7~8년 내에 수출 규모를 1,000억 달러(FY24 기준 212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이를 위해 인도를 기존 내연기관(ICE) 부품과 신형 전기차(EV) 부품 모두에서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인도자동차부품협회(ACMA)가 화요일(3.4) 밝힘.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이 핵심으로 꼽힘. ACM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공동 보고서(Revving Up Exports: The Next Phase of Export Growth for the Auto Component Industry)에 따르면, 첫째로 기존 내연기관(ICE) 및 전기차 공용 부품의 수출을 2~3배 확대해야 함. 엔진, 기어, 변속기 부품, 고무 브레이크, 액슬 서스펜션, 배선 하네스, 모터 등 11개 핵심 제품군이 수출 확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함.

둘째로 전기차 부품의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텔레매틱스 장치, 계기판, ABS 등의 국산화를 추진해 약 150~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ACMA 회장인 Sharda Suri Marwah는 “인도의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가 FY19 기준 25억 달러 적자에서 FY24 기준 3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며 1,0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글로벌 자동차 부품 무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과 유럽이 최대 수입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음.

자료원: 'Auto component industry sets \$100-b export target in 7-8 years', BL(3.5)

○ 인도 전기승용차 연간 판매 10만 대 돌파

인도의 전기 승용차(ePV) 시장(배터리 기반 자동차와 SUV 포함)이 주요 이정표를 넘어서며, 이번 회계연도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연간 10만대 판매를 돌파함.

FY25 상반기에는 FAME II 보조금 종료로 인해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V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회계연도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3월 26일(수) 오후 6시 기준(Vahan 데이터)에 따르면, FY25의 총 ePV 판매는 101,880대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FY24의 90,974대보다 증가한 수치임.

자료원: 'ePV sales cross 1 lakh units', BL(3.27)

< 기업별 주요 동향 >

○ 테슬라, 인도 첫 쇼룸 뭄바이 BKC에 오픈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움. 전기차(EV) 선도 기업 테슬라는 뭄바이의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BKC)에 첫 쇼룸을 확보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섬. 테슬라의 현지 법인 'Tesla India Motors & Energy'는 Univco Properties로부터 연면적 4,003제곱피트의 공간을 5년간 임차함. 해당 쇼룸은 테슬라의 인도 사업을 위한 플래그십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임.

자료원: 'Tesla Fans Plug In, 1st India Showroom to Open in Mumbai', ET(3.6)

○ CLSA, 테슬라 인도 진출이 현지 업체에 큰 위협 되지는 않을 것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사 CLSA는 테슬라가 25,000달러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BEV)를 출시하더라도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OEMs)에 미치는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현재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의 미국 공장 출고가는 약 35,000달러 수준임. 따라서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동일 모델의 기능을 대폭 줄이거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CLSA는 인도의 수입 관세가 15~20%로 조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의 가격은 타타 모터스(TaMo), 마힌드라 & 마힌드라(M&M), 마루티 스즈키(MSIL), 현대차(HMIL) 등 현지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4m 이상급 전기 SUV보다 여전히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테슬라가 25,000달러 모델을 출시하더라도 기존 모델 대비 사양과 성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반면, 인도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대비 우수한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Tesla entry not a major threat to EV OEMs: CLSA', BS(2.24)

○ 스코다 VW, 타타JSW와 EV 라이선스 협의

Skoda Auto Volkswagen India(이하 스코다 VW)가 전기차(EV)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타타 모터스 및 JSW 그룹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마힌드라 & 마힌드라와의 합작법인(JV) 설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힌드라와의 협상은 기업 가치 평가, 차량 플랫폼 공유, 핵심 계약 조건 등의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임.

스코다 VW가 인도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도 내 전기차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FY28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도의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III) 대응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라이선스 계약은 한 기업(licensor)이 기술, 특허, 브랜드 또는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licensee)에게 일정한 비용이나 로열티를 받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임.

자료원: 'Skoda Auto VW in Talks with JSW & Tata Motors for electric-Car Deal', ET(3.7)

○ 테네코, 인도를 글로벌 부품 허브로 주목.. "비용 경쟁력 및 기술력 강점"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테네코(Tenneco)의 Nathan Bowen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인도를 부품 조달 허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Bowen은 "중국이 오랫동안 핵심 공급망 중심지였고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어 "많은 고객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문의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뛰어난 기술력과 비용 경쟁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테네코에 따르면 인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임. 2021년 기준 인도의 순매출은 180억 달러에 달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북미 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음. 현재 인도는 테네코의 글로벌 매출에서 상위 5개국에 포함되며, 이는 5년 전 9위에서 크게 상승한 것임. 현재 테네코는 인도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방침임.

한편, 미국 정부가 인도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논의하는 가운데, Bowen은 "관세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테네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리적으로 다양한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관세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임.

자료원: 'Auto Firms Now Ask for More of India-made Parts', ET(3.12)

◦ 포드, 첸나이 공장에서 엔진 생산·수출 추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Ford)가 인도 첸나이 공장을 활용해 엔진 및 관련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2분기 중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번 계획에는 차량 생산이 포함되지 않음.

포드는 2021년 인도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했으며, 2022년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함. 약 25년간 인도 시장에서 활동했지만, 현지 점유율이 낮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철수를 결정한 바 있음.

자료원: 'Ford may Use Chennai Unit for Engine Exports', ET(3.18)

◦ 타타 모터스·기아, 4월부터 승용차 가격 인상.. 올해 두 번째 조치

타타 모터스와 기아자동차가 4월부터 승용차(PV) 전 라인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화요일(3.18) 발표함.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으로, 앞서 1월에도 3%의 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

이번 가격 조정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앞서 마루티 스즈키 역시 2025년 4월부터 자동차 가격을 4%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원자재 가격과 운영 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이번 가격 인상은 인도 승용차 시장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표됨.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34% 감소한 303,398대를 기록함.

자료원: 'TaMo, Kia to hike PV prices to offset input costs', BS(3.19)

◦ 마루티, 하리아나 카르코다에 세 번째 공장에 741억 루피 투자 계획

인도의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MSIL)가 하리아나주 기존 시설 내에 세 번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741억 루피(약 8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이번 투자로 연간 25만 대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총 생산 능력은 2029년까지 75만 대로 증가할 예정임.

MSIL은 이번 투자가 내부 유보금을 통해 자금 조달될 것이며, 시장 수요 증가 및 수출 확대를 고려해 세 번째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하리아나의 신규 공장은 그린필드(Greenfield) 프로젝트로, 첫 번째 공장은 지난달(2025년 2월) 상업 생산을 시작함.

현재 MSIL은 Gurugram, Manesar, Kharkhoda 등 하리아나에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자라트에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원: 'Maruti to invest ₹7,410 cr in 3rd plant at Haryana's Kharkhoda', BL(3.27)

< 스마트폰 산업/기업 동향 >

○ FY25 인도 스마트폰 수출 210억 달러 돌파.. 전년 대비 54% 증가

FY25 첫 11개월 동안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 규모가 1조 7,500억 루피(약 210억 달러)를 넘어섬. 이는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예상한 200억 달러 전망치를 초과한 수치이며,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어 최종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에 따르면, 11개월 동안의 스마트폰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함. 특히, 애플(Apple Inc)이 1조 2500억 루피(약 1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아이폰 수출은 전체 스마트폰 수출의 70%를 차지함.

업계 추산에 따르면, 폭스콘, 타타일렉트로닉스, 페가트론 등 애플 공급업체가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삼성 및 인도 브랜드가 담당함. 현재 미국과 유럽이 인도 스마트폰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이에 힘입어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확대를 검토 중임.

자료원: 'Smartphone exports beat estimates, cross \$21 bn in FY25 so far', BS(3.17)

○ 인도, 애플 부품 수출 본격화..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

인도가 처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 부품을 수출하며, 애플 제품인 맥북(MacBook), 에어팟(AirPods), 애플 워치(Apple Watch), 애플 펜슬(Apple Pencil), 아이폰(iPhone) 제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이는 애플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협력사인 Motherson Group, Jabil, Aequs, 타타 일렉트로닉스 등은 아이패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메카닉스(외장 부품 포함)를 인도에서 생산해 조립 공장으로 수출하고 있음.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인도 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이폰 및 핵심 부품을 넘어 국내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메카닉스, 즉 외장 부품을 인도에서 대량 생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인도 전자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기존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품 및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자체 부품 제조 및 수출을 시작하며 전자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

업계 분석가들은 "인도가 전자 제품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2030~31년까지 전자 부품 수출 목표인 350~4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인도 정부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곧 발표할 예정임.

Counterpoint Research의 Neil Shah 부사장은 "인도는 이제 중국과 베트남과 함께 애플의 핵심 제조 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의 주요 부품을 수출하는 공급처로도 부상했다"고 평가함.

애플은 인도의 우수한 제조업체들을 협력사로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사들이 인도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지난해 애플은 미국 미시간에 본사를 둔 Jabil을 추가 협력사로 선정, 푸네(Pune) 공장에서 에어팟 부품 생산을 시작함. 카르나타카(Karnataka)주 Hubballi에 위치한 Aequs는 맥북용 부품을, Motherson Group은 아이폰 외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특히, 애플은 3년 전 타타 일렉트로닉스를 아이폰 생산을 위한 첫 번째 현지 협력사로 선정했으며, 이후 타타는 인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확대해 줌.

현재 Jabil과 Aequs는 각각 애플 펜슬 및 애플 워치용 부품을 추가로 생산하며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음. 현재 인도에서는 아이폰만 생산하고 있지만, 조만간 에어팟 생산도 시작될 예정임. 인도에서 제조된 기타 제품의 부품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돼 최종 조립될 계획임.

Shah 부사장은 "이번 변화는 인도의 전자 제조 생태계 형성의 시작을 의미하며, 현재는 외장 부품 중심이지만 'Make in India' 정책이 더욱 발전하면 향후 고급 부품 생산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지난 2년간 애플은 인도 내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현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현재 애플의 인도 협력사로는 Sunwoda(배터리팩 제조), Foxlink(케이블 제조), Salcomp(코일·전원장치·자기 부품 제조) 등이 있으며, 최근 Bharat Forge도 애플의 메카닉스 제조 파트너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자료원: 'Make in India: Delivers Export-Quality Fruit for Apple Vendors', ET(2.28)

○ **모토로라, 인도 스마트폰 생산 확대.. 미국 수출 두 배 이상 증가 전망**

삼성에 이어 모토로라(Motorola)도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

딕슨은 인도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 아래 모토로라의 핵심 제조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월 1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음. Lal 대표는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수출 물량을 포함해 향후 몇 달간 수주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음.

모토로라는 현재 연간 1,300만 대 수준인 생산량을 오는 회계연도에 2,300만~3,00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임.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이 수출될 예정이며 주요 시장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모토로라는 인도 생산량의 20~25%인 약 220만 대를 북미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이 수치는 내년 회계연도에 1,200만~1,800만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생산 확대 계획은 삼성 또한 인도에서의 생산을 늘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음. 다만,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모토로라는 이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임.

현재 인도는 완제품 스마트폰 수입 시 기본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1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인도에서의 생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이 인도산 스마트폰에 16.5%의 관세를 부과하면, 모토로라는 인도 생산량을 800만~1,000만 대 수준으로 줄이고, 관세가 0%인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현재 모토로라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와 미국 정부는 상호 이익을 위한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 중임. 업계는 인도 정부에 미국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타 전자제품의 수입 관세를 낮춰 인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자료원: 'Another Phone Co Steps Up India Push to Cut China Play', ET(3.12)

< 통신 산업/기업 동향 >

○ 인도 통신업계, 생성형 AI 활용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혁신이 인도 이동통신업체들의 네트워크 및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Reliance Jio와 Bharti Airtel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Application-as-a-Service' 형태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Bharti Airtel은 구글과 협력해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위치 인텔리전스, 다국어 음성 분석, 정밀 맞춤형 광고 마케팅 등 차별화된 AI 솔루션을 개발 중임.

한편, Reliance Jio는 AI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 Nvidia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소매, 헬스케어, 농업,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계획임. 특히, Jio는 'Jio Brain'이라는 풀스택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통해 AI-as-a-Service 및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임.

자료원: 'Jio & Airtel Partner Big Tech Cos to Reap Benefits of GenAI', ET(3.4)

○ 인도 정부, BSNL 5G 장비 계약에 해외 기업 참여 검토

인도 정부가 국영 통신사 BSNL의 5G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통신 장비 계약에 일부 해외 공급업체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현재까지 인도 정부는 BSNL의 4G 서비스 및 5G 업그레이드에 대해 국산 기술만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정부 내에서는 BSNL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현재 BSNL의 4G 네트워크 장비 공급은 타타 컨설팅 서비스(TCS)가 주도하는 국내 컨소시엄이 전담하고 있음.

한 소식통은 "정부는 BSNL의 5G 장비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50%를 국내 공급업체에 할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벤더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BSNL은 향후 전국적인 5G 단독모드(SA) 구축을 위해 약 7만~10만 개의 5G 기지국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BSNL의 4G 네트워크 장비 성능과 품질이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 삼성전자(한국) 등 글로벌 공급업체가 민간 통신사(릴라이언스 지오, 바르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와 협력해 공급한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벤더의 참여가 BSNL의 전국 5G SA 네트워크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검토 중임.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국내 장비업체의 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BSN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BSNL은 아직 전국적인 4G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5G 구축 계획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임. 지난해 7월 민간 통신사들이 요금 인상을 단행한 후, 가격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BSNL로 대거 이동했으나, 네트워크 품질 문제와 4G 서비스 부재로 인해 다시 민간 통신사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BSNL의 전국 5G S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구매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BSNL이 올해 후반기에 5G 장비 도입을 위한 입찰공고(RFP)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Foreign Bidders May be Allowed in BSNL's 5G Network Upgrade', ET(3.6)

◦ Bharti Airtel, SpaceX와 손잡고 Starlink로 인도 위성 인터넷 확대

Bharti Airtel이 일론 머스크의 SpaceX와 손잡고 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Starlink'를 인도 시장에 도입하기로 함. 이는 제프 베이조스,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무케시 암바니 등 글로벌 거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도 위성통신(Satcom)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Airtel은 이미 자체적으로도 OneWeb을 통해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Starlink의 주파수 할당 방식에 반대해 왔음. 현재 인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들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식과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정을 기다리고 있음.

Airtel과 SpaceX는 화요일(3.11)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인도에서 체결된 최초의 Starlink 서비스 계약이며, SpaceX가 인도 내 판매를 위한 공식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힘.

SpaceX의 사장 겸 COO인 Gwynne Shotwell은 "Airtel은 인도 통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Airtel과 협력하여 Starlink를 보완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함.

이번 발표는 Airtel이 이미 Starlink의 경쟁사인 Eutelsat OneWeb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Bharti 그룹은 Eutelsat OneWeb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기존에는 OneWeb을 중심으로 위성통신 사업을 추진해 왔음.

업계 관계자들은 Airtel이 SpaceX와 협력하게 된 배경으로, Starlink가 OneWeb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저궤도 위성(LEO)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높은 위성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음.

자료원: 'Mittal and Musk Chart a Surprise Orbit', ET(3.12)

◦ 인포시스, 위성 개발 도전.. 인도 우주 산업에 출사표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가 인도 우주 기술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위성 개발 및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포시스는 우주 기술 스타트업 GalaxEye 및 또 다른 엔지니어링 R&D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 우주 규제 기관인 인도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의 150억 루피(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 위성 군집 프로젝트 입찰 후보로 선정된 6개 민간 기업 컨소시엄 중 하나로 포함됨.

IN-SPACe는 이들 6개 팀에 대해 초안을 기반으로 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세부적인 재정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함. 이후, 최종 선정된 단 하나의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맡게 될 예정임.

그동안 지리공간(Geospatial) 데이터는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제공해 왔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포시스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우주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지리공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 우주 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만 제공하고, 위성 설계·개발·운영 전반을 민간 부문이 맡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자체적으로 위성 군집을 운영하며 방대한 지리공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IN-SPACe는 2024년 7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을 통한 지구 관측(EO)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제안 요청을 발표한 바 있음. 선정된 기업은 위성 설계 및 제작, 위성 발사 후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다운로드 및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한편, IIT-마드라스에서 출범해 현재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GalaxEye Space는 다중 센서 위성 및 동기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GalaxEye 공동 창업자 겸 CEO Suyash Singh는 "RFP를 수령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 우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원: 'Infosys eyes space tech entry with a bid to build satellite systems', BL(3.18)

◦ Starlink의 인도 진출, 자동 승인 없다.. 정부 '절차 준수' 강조

Bharti Airtel과 Reliance Jio가 SpaceX와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Starlink의 인도 위성통신(Satcom) 서비스 진출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Jyotiraditya Scindia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명확한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Starlink를 포함한 모든 Satcom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힘.

현재 Starlink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Project Kuiper 및 캐나다의 Telesat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위성 통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Scindia 장관은 “정부는 명확한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즉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인도통신규제청(TRAI)이 가격 책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통신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할당될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원: ‘Rules same for all firms eyeing satcom services in India, says Scindia’, BL(3.19)

조선업

○ 인도, 최초로 테일링 정책 추진

인도 광산부가 국내 최초의 테일링(Tailings) 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G. Kishan Reddy 광산부 장관은 향후 90일 동안 인도 광산국(IBM)과 석탄관리기구(CCO) 등 규제 기관이 테일링 샘플을 검사하고, 핵심 광물 함유량 및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테일링은 광물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미세하게 분쇄된 암석, 물, 화학물질 등을 포함하며 액체, 고체, 슬러리(slurry)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 이번 검사 대상에는 석유 부문을 포함한 기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광물 폐기물도 포함될 예정임.

Reddy 장관은 “테일링뿐만 아니라 석유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폐기물에서도 핵심 광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과잉 채굴(overburden), 폐기물 더미(waste dumping), 테일링 및 광물 폐기물 검사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함.

최근 인도 정부는 소규모 광물 채굴 허가에서도 핵심 광물 존재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이에 따라, 기존에 건설 및 도자기 산업용으로 분류되었던 barytes, feldspar, mica, quartz 등도 핵심 광물 포함 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해당 자원의 가치가 충분할 경우 채굴 및 보고 의무가 부여됨.

Reddy 장관은 “이번 조치는 예산 발표 당시 처음 언급된 테일링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며, 검사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 광물 탐사 기금(NMET) 활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재 광산부는 105개의 광물 블록을 성공적으로 경매했으며, 추가적으로 70개의 블록 경매가 진행 중임. 특히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는 3월 석회석 블록 경매가 검토 중이며, 해당 지역의 리튬 광물 탐사 타당성 조사는 4~5월 완료될 예정임.

자료원: ‘India to launch first-ever tailings policy; more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rgeted’, BL(2.28)

○ **인도 뷰티 시장 변화.. 전통 브랜드 성장 둔화, 신흥·글로벌 브랜드 강세**

인도의 뷰티 시장에서 기존 자연주의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신흥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FY24 동안 Forest Essentials, Colorbar, Kama Ayurveda, Body Shop 등 전통적인 뷰티 브랜드의 판매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Minimalist, Pilgrim 같은 신흥 브랜드와 Shiseido, 이니스프리, Eucerin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더마코스메틱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주의 브랜드보다 빠른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음.

기존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L'Oréal, Nykaa, Sephora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Pilgrim은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Minimalist는 80% 성장했으며, Foxtale의 매출은 500% 급증함. Third Eyesight의 D. Dutta는 "기존 브랜드의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FY25에는 뷰티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인도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은 현재 21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까지 34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료원: 'Beauty Retail Market Gets a Facelift', ET(3.20)

○ **아마존 인디아, 12백만 개의 300루피 미만 제품에 대해 판매 수수료 면제**

아마존 인디아는 오는 4월 7일부터 300루피 미만 가격의 1,200만 개 이상의 상품에 대해 판매 수수료 (Referral Fee)를 전면 면제할 예정임. 이는 플랫폼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수료 인하 정책임.

이번 수수료 면제는 의류, 신발, 보석류, 식료품, 홈데코, 뷰티, 장난감, 주방용품 등 135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됨. 현재 이들 품목의 판매 수수료는 2%에서 16% 사이로 책정돼 있음. 또한, 아마존 인디아는 외부 배송 채널(예: Easy Ship, Seller Flex)을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국내 배송 요금을 기존 ₹77에서 ₹65로 인하할 계획임.

1kg 미만 제품의 무게 처리 요금도 최대 ₹17까지 감면되며,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송하는 경우, 두 번째 유닛의 수수료는 최대 90%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Amazon India to Scrap Referral Fees on 12m Products Under ₹300', ET(3.24)

철강

○ 인도 정부, 철강 산업 보호 위해 특정 철강 제품에 12%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화요일(3.18), 최근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 200일 동안 12%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한다고 발표함. 단, 수입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CIF 기준)

부과대상은 **비합금 및 합금강 평판제품**(Non-Alloy and Alloy Steel Flat Products) 임.

* (참고) 예비조사 시 관련 HS CODE : 7208, 7209, 7210, 7211, 7212, 7225, 7226

DGTR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을 30일 이내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임.

한편,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 방향성 전기강, 알루미늄 도금강 등 일부 철강 제품은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대상 제외 품목 (단위 : USD, MT 당)>

연번	세부품목	최저가격
1	열연강판 (Hot Rolled coil, sheets and plate)	675
2	후판 (Hot Rolled Plate Mill Plate)	695
3	냉연강판 (Cold Rolled Coils and Sheets)	824
4	아연도강판 (Metallic Coated Steel Coils and Sheets, whether or not profiled, including Galvanneal, Coated with Zinc or Aluminium-Zinc or Zinc-Aluminium-Magnesium)	861
5	칼라강판 (Colour Coated coils and sheets, whether or not profiled)	964

자료원: 'Govt recommends 12% provisional safeguard duty on some steel products', BS(3.19)/ 무역구제총국(DGTR) 고시 공문(3.18.)

○ 인도 철강업계, 수입 증가 속 생산 둔화

FTA 체결국 및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철강업계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설비 유지보수를 이유로 감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정부 데이터 및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제철소들의 FY25('24.4월~'25.1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미만 증가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인도의 누적 완제 철강 생산량은 1억 2,0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이는 중소 철강 제조업체 및 진달스틸의 생산 증가(20%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반면, 인도 전체 철강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대형 제철소들은 같은 기간 6,580만 톤을 생산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침. 중소 및 2차 제철소들은 5,470만 톤을 생산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국영 철강업체인 SAIL의 4월~1월 누적 생산량은 1,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함. 민간 부문 최대 철강업체인 타타스틸과 JSW스틸은 각각 1,780만 톤(전년 대비 1.5% 증가), 1,940만 톤 수준을 기록함.

BigMint에 따르면, 철강 종합지수는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전주 대비 0.9% 상승한 130.7포인트를 기록함. 보고서는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서도 가격이 상승했다"며 "일부 철강업체들이 시장 하락세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려는 의도적인 생산 조정에 나섰다"고 분석함.

실제로 2월 들어 열연코일(HRC) 가격은 톤당 800루피(약 9.16달러) 상승해 48,000~50,000루피(약 549.5~572.4달러) 선으로 올랐으며, 냉연코일(CRC) 가격도 600루피(약 6.87달러) 상승해 53,500~56,000루피(약 612.5~641.1달러)로 형성됨.

같은 기간 인도의 철강 소비량은 1억 2,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특히,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재고 변동량은 -61만 3,000톤을 기록하며, 강한 수요에 따른 재고 감소가 확인됨.

한편, BNP Paribas는 인도 도로공사(NHAI)가 정부 프로젝트에서 일체형 제철소(Integrated Steel Plant)에서 생산된 철강만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밝힘.

BNP Paribas는 "FY25 9개월간 중앙정부의 자본지출 집행률은 66%로, 전년(72%)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6% y-o-y) 대비 인프라 부문 자본지출 감소율은 1%에 불과해 향후 철강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자료원: 'Steel majors see flat production amid import concerns', BL(3.4)

○ 인도 철강업계, 수입 증가 속 고부가가치 제품·온라인 판매로 돌파구 모색

인도 철강업계가 대규모 수입 증가와 전통적인 철강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및 중소기업(MSME) 대상 온라인 판매 강화에 나서고 있음.

미국 정부의 25% 철강 수입 관세 부과로 인도 철강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데다, 국내에서도 저가 수입 제품의 유입으로 가격 압박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Choice Broking의 Utsav Verma는 "지난 9개월 동안 인도 내 철강 수입이 16% 증가해 81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과잉 수출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인도와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철강업체들의 EBITDA 및 톤당 EBITDA가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수입 대체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아르셀로미탈·닛폰스틸(AM/NS India)은 최근 구자라트주 Hazira 공장에서 최첨단 연속 아연도금 라인(Continuous Galvanizing

Line)을 가동하며 고급 자동차용 철강 제품 생산을 시작함. 이는 기존 Optigal 및 Magnelis 제품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임.

AM/NS India의 영업·마케팅 담당 이사 Ranjan Dhar는 "새로운 제품 출시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 필요한 철강을 전량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제품은 모회사인 아르셀로미탈과 닛폰스틸의 글로벌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는 인도 최초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강조함.

또한, 2024년부터 정부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가 고급 합금 및 고강도 자동차용 철강 제품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인도의 핵심 소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음.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도 철강업체들은 수입 대체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JSW 스틸은 2023년 12월 분기에 고부가가치 및 특화 제품(value added and speciality products)의 국내 판매가 1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함. 또한, 올해 280개의 JSW Shoppe 및 JSW Shoppe Connect 매장을 새로 개설해 브랜드 매장을 총 2,339개(FY24 기준)로 확대함. 현재 도시 지역에는 739개 JSW Shoppe가, 준도시 및 농촌 지역에는 1,600개의 JSW Shoppe Connect가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28개의 체험 센터도 마련됨.

한편, JSW One이라는 온라인 철강 플랫폼은 전년 대비 2.7배 성장한 1,400억 루피(약 16억 달러)의 총 상품가치(GMV)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자료원: 'Steel-makers bet on value-added products to beat pricing pressure', BL(3.12)

○ 인도 철강 시장, 보호관세 가능성 속 가격 변동성 확대

최근 인도 철강 가격이 보호관세 도입 가능성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이 철강 수출을 위축시키고 수입 증가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igM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열연코일(HRC) 가격은 전월 대비 톤당 600루피(약 6.93달러) 상승하며, 2월의 48,400루피(약 559.39달러)에서 49,000루피(약 566.32달러)로 올랐음. 1월 평균 가격은 톤당 47,000루피(약 543.20달러)였음. 다만, 전년 동기 대비 HRC 가격은 여전히 FY24 수준을 밑돌고 있음.

롱 스틸(Long Steel) 부문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컸음. FY25 가격은 FY24와 비교해 일부 월에서는 상승했으나, 일부 월에서는 하락함. 2025년 3월 철근 가격은 전월 대비 톤당 1,600루피(약 18.49달러) 상승하며, 2월의 52,800루피(약 610.26달러)에서 54,400루피(약 628.76달러)로 상승함.

현재 인도 철강 수입의 대부분은 판재류(Flat Steel)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2일부터 미국이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흐름 변화로 인해 인도의 철강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Crisil Intelligence의 Sehul Bhatt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철강업체들이 인도 외 다른 시장으로 공급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더욱 저렴한 철강이 인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현재 인도 철강 가격은 이미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추가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인도 정부가 보호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 조치의 시기와 강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FY26에는 철강 원재료(철광석·코킹탄) 가격 안정 및 중국의 철강 감산과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인해 일부 마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봄.

자료원: 'Steel prices rise but looming trade war sparks concerns', BS(3.19)

○ 인도, EU 철강 수입 보호조치 변경에 WTO 협의 요청

인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 수입 보호조치 변경(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의를 요청함.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지난주 EU는 특정 철강 제품의 수입 보호조치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현재 EU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인도, 중국, 튀르키예, 한국, 이집트, 베트남 등임.

인도 정부는 WTO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EU의 조정안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힘. FY24 동안 인도의 철강 및 철강 제품 대EU 수출액은 66억4,000만 달러로, 전년도의 61억 달러보다 증가함. WTO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가 수입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고, 무역 보상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음.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복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음.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EU가 특정 철강 제품군에 대한 보호관세를 2026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임. 해당 품목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됨. EU는 2018년부터 현재의 철강 수입 보호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정안에서는 잔여 쿼터 재배분, 제재 물량 조정, 쿼터 상한선 도입 등의 변화가 포함돼 있음.

자료원: 'India Keen to Talk EU Steel Safeguard Duty', ET(3.20)

○ 철강부, PLI 2차 라운드에서 1,700억 루피 투자 유치.. 특수강 생산 확대 목표

인도 철강부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2차 라운드에서 25개 기업이 총 42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1,700억 루피(약 1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함.

이번 2차 라운드는 특수강(specialty steel)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진행됨.

"투자 유치 및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생산 목표에 따라 3~4%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라운드에서는 23개 기업이 44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미 한 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이번 2차 라운드는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철강부는 성명을 통해 밝힘.

1차 라운드에서는 총 4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바 있음.

자료원: 'Steel PLI 1.1 gets 42 applications from 25 firms to invest ₹17,000 crore', BL(3.25)

○ JSW 스틸, 글로벌 철강업계 시가총액 1위 등극

JSW 스틸이 시가총액 305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철강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떠올랐음. 이로써 JSW 스틸은 미국의 누코어(Nucor Corp, 294억 달러)와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269억 달러) 등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차지함.

전 세계 철강업체들이 수요 부진과 무역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 철강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지속적인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지는 못했지만, 원자재 비용 하락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누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타타스틸과 JSW 스틸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향후 내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함.

Vishnu Kant Upadhyay(Master Capital Services 리서치 및 자문 부문 AVP)는 "JSW 스틸은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4,300만 톤, 2030년까지 5,1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미국이 무역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인도가 '철강 투매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Kota는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12% 수입 관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만큼,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원: 'JSW becomes numero uno global steel firm by m-cap', BL(3.26)

반도체 · AI

< 정부 정책동향 >

○ 인도, 반도체 투자 박차.. 반도체 미션 'ISM 1.0' 승인 마무리, 2.0 출격 대기

인도 정부가 "인도 반도체 미션(ISM) 1.0"의 1차 단계에서 보류 중이던 반도체 프로젝트 승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승인 대상에는 HCL-폭스콘 합작사, Hiranandani Group의 Tarq Semiconductors, 그리고 2~3개 추가 기업이 포함됨.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M 1.0의 7,600억 루피(약 87억 달러) 중 현재 약 460~470억 루피(약 5억 3천만~5억 4천만 달러)가 남아 있으며, 이를 이번 4~5개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해당 제안들은 거의 승인 단계에 있으며, 최종 절차적 승인만 남은 상태임. 또한, ISM 1.0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새로운 제안서를 모집하는 "ISM 2.0"이 출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ET는 HCL과 폭스콘의 합작사(JV)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에 3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 합작사는 반도체 조립-테스트 아웃소싱(OSAT)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폭스콘은 약 3,720만 달러를 투자해 40%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임.

Tarq Semiconductors는 2,884억 루피(약 32억 7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함. 해당 기업은 노이다에 125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장치, 집적회로, 광전자 부품 등을 생산할 예정임.

7,600억 루피의 예산 중 1,000억 루피(약 11억 5천만 달러)는 반도체 설계 연계 인센티브(DLI) 프로그램, 100억 루피(약 1억 1,500만 달러)는 정부 소유 Mohali SCL 팹 시설 현대화에 배정됨. 나머지 6,040억 루피(약 69억 4천만 달러)는 기존 승인된 반도체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될 예정임.

현재까지 인도 정부가 승인한 반도체 프로젝트는 총 5개*임. 해당 5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조 5,000억 루피(약 172억 달러)에 달하며, 매일 7,000만 개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4개는 반도체 조립(Chip Assembly) 프로젝트, 1개는 타타 그룹의 반도체 제조 팹(Chip Fabrication Plant)

자료원: 'Govt Set to Clear Next Set of Chip Proposals under ISM', ET(3.6)

○ 인도, 'Semicon 2.0' 추진.. 지속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초점

인도 정부는 반도체 미션(ISM) 2단계, 즉 'Semicon 2.0'을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을 고도화하고, 'Made in India' 반도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소재, 가스 공급업체 지원도 이번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S Krishnan 전자정보기술부(MeitY) 차관은 구자라트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ujarat SemiConnect 행사에서 "Semicon 2.0의 프로그램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Krishnan은 Semicon 1.0에서 인도 정부가 '성숙한 기술'(mature technologies)에 집중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며, "이제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사슬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현재 진행중인) 1단계에서는 한 개의 대형 실리콘 반도체 팹(SEMOS)과 한두 개의 복합 반도체 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음.

정부는 2021년 12월 Semicon 1.0을 발표하며 총 7,600억 루피(약 87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팹(Fab), ATMP, OSAT 시설 지원(6,500억 루피; 약 74억 6천만 달러)
- Mohali 반도체 연구소 현대화(1,000억 루피; 약 11억 5천만 달러)
- 반도체 설계 지원을 위한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DLI) 프로그램(100억 루피; 약 1억 1천만 달러)

Krishnan은 "6,500억 루피 중 6,000억 루피(약 68억 8천만 달러) 이상이 5개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프로젝트도 검토 중이며 곧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힘. 그는 또한 "1단계 신청 접수는 이미 종료됐다"고 말함.

반도체 미션 2.0에서는 DLI 프로그램을 개편해 더욱 도전적인 설계 혁신을 지원할 방침임. Krishnan은 "반도체 칩 설계뿐만 아니라 패키징 설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첨단 패키징 기술을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자료원: 'Semicon 2.0 to ensure 'Made in India' chips gain global market traction', BL(3.7)

○ 인도, AI 컴퓨팅 역량 확대.. 14,000개 GPU 개방 및 자체 AI 모델 개발 박차

스타트업, 연구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이제 IndiaAI Compute Portal에서 14,000개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로 4,000개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Ashwini Vaishnaw 전자정보 기술부(MeitY) 장관이 목요일(3.6) 밝힘.

정부는 현재 인도 자체 AI 기초 모델 개발을 위한 67개의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이 중 22개는 대형 언어 모델(LLM)이라고 Vaishnaw 장관은 전함.

그는 "매 분기마다 더 많은 GPU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공용 컴퓨팅 시설의 상당 부분이 인도의 자체 AI 기초 모델 구축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숙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최소 3~5개를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Vaishnaw 장관은 데이터셋, AI 모델 및 활용 사례를 제공하는 'AIKosha' 플랫폼을 발표함. 이 플랫폼은 1년 전 출범한 IndiaAI Mission(1000억 루피 예산)의 핵심 성과 중 하나임.

AIKosha에는 농업, 기상 예측, 물류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수집된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가 포함됨. 또한, Bhashini(인도 정부의 다국어 번역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도 포함되어 다국어 AI 모델 개발을 지원함.

Vaishnaw 장관은 3~4년 내 인도 자체 GPU 칩을 개발하고, 5년 내 AI·반도체·딥테크 분야에서 세계 5대 기술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최근 미국이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GPU 수출을 연간 5만 개로 제한했지만, Vaishnaw 장관은 "이 조치가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함.

자료원: 'IT Minister Switches on IndiaAI Compute Portal Offering 14k GPUs', ET(3.7)

< 기업별 동향 >

○ 타타 일렉트로닉스, 대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인도 디스플레이 칩 생산 추진

타타 일렉트로닉스(TEPL)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인도 구자라트 Dholera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을 공동 생산하기 위한 삼자 협약을 체결함.

이 협약은 구자라트 Gandhinagar에서 열린 Gujarat Semiconnect Summit에서 공개됨. TEPL은 대만의 팹리스 DDI(display driver ICs) 및 반도체 제품 분야의 선도 기업 Himax Technologies, Inc. 및 PSM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 공장은 PSMC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하이맥스의 디스플레이 칩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TEPL CEO 겸 MD Randhir Thakur는 "타타 일렉트로닉스의 역량과 하이맥스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WiseEye™ 초저전력 AI 감지 기술, 그리고 PSMC의 검증된 제조 솔루션이 결합되어 국내외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이 행사에서는 인도 반도체 미션(ISM)과 TEPL 간에 재정 지원 협약(FSA)도 체결됨. 이에 따라, Dholera에 설립될 반도체 팹 시설에 총 9,152억 6천만 루피(약 105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또한, TEPL과 인도공과대학(IIT) Gandhinagar 간의 두 번째 MoU도 체결됨.

자료원: 'Tata Electronics, Taiwan semic players sign MoU for display unit in Gujarat', BL(3.6)

○ Jabil, 구자라트에 100억 루피 투자.. 실리콘 포토닉스 제조 시설 설립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공급망·제조 솔루션 기업인 자빌(Jabil Inc.)이 구자라트에 100억 루피(약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실리콘 포토닉스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고 수요일(3.5) 발표함. 이 신규 시설은 AI, 통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포토닉스 트랜시버(광 데이터 통신 장치) 생산에 주력할 예정임.

단기적으로는 구자라트 주정부와 협력해 실리콘 포토닉스 웨이퍼 후공정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 공동 패키징 광학(Co-Packaged Optics)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자료원: 'Jabil to open ₹1,000 crore silicon photonics manufacturing facility', BL(3.6)

○ Kaynes Technology, 구자라트에 330억 루피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6월 ATP 가동

Kaynes Technology가 구자라트 Sanand에 330억 루피(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오는 6월부터 반도체 칩 조립·테스트·패키징(ATP)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

Kaynes Technology의 100% 자회사인 'Kaynes Semicon Private Ltd'는 6일 신규 반도체 공장의 착공식을 개최함. 회사 측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양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공장은 하루 600만 개의 반도체 칩을 조립·테스트·마킹·패키징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어 예정임. 생산된 칩은 산업용, 자동차, 전기차, 소비자 전자제품, 정보기술(IT), 통신,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될 계획임.

또한, Kaynes는 글로벌 반도체 칩 제조업체 'Alpha and Omega Semiconductor'와 수년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AOS는 파워 MOS펫(Power MOSFETs),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s), 지능형 전력 모듈(IPMs) 등의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임.

자료원: 'Kaynes Tech to roll out first semiconductor chip from Sanand unit in June', BL(3.6)

○ 인피니언, 구자라트 기프트시티에 GCC 설립.. 400명 고용 예정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는 월요일(3.24), 인도의 구자라트주 Gift City에 글로벌 역량 센터(GCC)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이번 센터는 총 40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예정이며, 구자라트주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GCC임. CEO Jochen Hanebeck은 "우리는 2030년까지 인도에서 연 매출 10억 유로(약 10억 8천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도 시장에 대한 강한 성장 의지를 밝힘.

자료원: 'Infineon Tech plans GCC at Gift City', BL(3.25)

○ 인피니언, 인도 R&D 인력 두 배 확대 계획.. 반도체 시장 공략 박차

독일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이 향후 5년 동안 인도 내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직원 수를 현재의 두 배인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Andreas Urschitz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겸 경영이사회 멤버는 화요일(3.18) 발표에서 “인피니언의 최첨단 연결성 컨트롤러 대부분이 인도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포함한 다양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또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상당 부분도 인도 팀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피니언은 최근 인도 모할리에 기반을 둔 CDIL 세미컨덕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이번 협약을 통해 인피니언은 CDIL에 반도체 칩 웨이퍼를 공급하며, CDIL은 이를 패키징해 인도 시장을 위한 개별 및 모듈 반도체 제품으로 제공할 예정임.

자료원: 'Infineon aims to double India workforce to 5,000 by 2030: CMO', BS(3.19)

○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 인도 내 제조 거점 검토

타타 일렉트로닉스의 협력사인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이 인도 내 제조 거점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인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흐름과 맞물림.

도쿄 일렉트론 인도 프로젝트 책임자인 V Bharadwaj는 “현재로서는 인도에서 즉각적인 생산을 시작할 계획은 없지만, 시장 수요에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힘. 그는 “현재 대부분의 작업이 일본과 일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도 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도쿄 일렉트론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Lam Research가 카르나타카주에 1,000억 루피(약 1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임. Lam Research는 이번 투자를 통해 현지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공정을 직접 설계, 테스트,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미 2022년 벵갈루루에 첫 번째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설한 바 있음)

지난해 Applied Materials 또한 인도 내 제조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당시 해당 시설이 반도체 장비 제조에 집중할지, 반도체 생산 자체에 초점을 맞출지는 불분명했으나, 우선적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옴.

이와 함께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KLA, Lam Research,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원하는 핵심 장비 공급업체들임. 최근 인도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Applied Materials는 지난해 첸나이 인근 Taramani에 첨단 인공지능(AI) 기반 반도체 및 장비 기술 개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자료원: 'Tokyo Electron Eyeing India Ops', ET(3.3)

○ **타타그룹의 반도체 공장, FY28 2분기 완공 예정**

구자라트 주 돌레라 특별투자지역(SIR)에 건설 중인 타타그룹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FY28 2분기 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구자라트 주정부가 3월 22일(금) 주의회에 보고했음.

주정부는 질의응답 시간 중 서면 답변을 통해 “타타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프라이빗 리미티드(Tat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vt Ltd)의 제조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FY28 2분기(2027년 7~9월)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밝혔음.

타타 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는 타타 손즈의 100% 자회사로, 대만 파워칩(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최초의 AI 기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있음. 총 투자 규모는 9,100억 루피에 달함.

자료원: ‘Tata’s semiconductor fab likely to be completed by Q2 of FY28’

○ **HCL-폭스콘 OSAT 합작사, EPC 파트너 물색 착수**

HCL과 폭스콘(Foxconn)의 합작 법인(JV)이 자사의 반도체 후공정(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ing) 시설 건설을 위해 EPC(설계·조달·시공)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의 라센 앤드 투브로(L&T) 및 대만의 대형 EPC 기업 CTCI와 협의를 시작했음.

관계자에 따르면, EPC 업체는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조달, 건설, 완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한 관계자는 “폭스콘의 반도체 그룹 대표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HCL 측이 폭스콘과 협력 경험이 있는 L&T와 CTCI를 대상으로 미팅을 주선했음”이라며, “이번 논의는 OSAT 시설의 EPC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예비 단계의 협의로, HCL-폭스콘 측은 이달 말까지 인도 정부 내각의 최종 승인을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설명했음.

합작사는 현재 우타르프라데시(UP)에 인도 최초로 설립될 예정인 OSAT 시설에 대해 내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폭스콘은 약 3,720만 달러(약 310억 루피)를 투자하고 지분의 40%를 보유 중임.

자료원: ‘HCL-Foxconn OSAT JV begins Scouting for EPC Partners’, ET(3.24)

○ **인도, 반도체 연구 논문 발표 세계 3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관련 연구 논문 발표 건수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며 일본, 한국, 독일을 앞섰다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신기술 관측소(Emerging Technology Observatory) 보고서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기관의 연구자들이 총 39,709편의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연구 논문(472,819편)의 8.4%를 차지함. 같은 기간 인도의 연구 기여도는 26%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있음.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60,852편(34%)의 논문을 발표하며 미국을 제치고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함.

업계 전문가들은 Qualcomm, AMD, Inte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에 연구 개발(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인도 내 칩 설계 관련 전문 인력만 5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평가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엔지니어의 19%가 인도 출신으로, 연구 및 개발 인프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anish Faruqi, Fab Economics CEO는 "인도의 연구는 주로 반도체 설계의 백엔드(back-end) 또는 제품 설계(value chain)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부가 연구개발(R&D)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말함.

정부 지원도 증가하고 있음.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FY15 18억 3,520만 루피(약 2,103만 달러)에서 FY24 25억 1천만 루피(약 2,877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최첨단 반도체 연구를 위해 200억 루피(약 2억 3천만 달러)가 추가 투입됨.

자료원: 'India Ranks Third Globally in Chip Design Research Papers', ET(3.10)

○ 인도 반도체 기업, 글로벌 인재 영입 박차

인도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함.

현재 인도 내 반도체 생태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C레벨(최고경영진)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인도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우수 반도체 기업 출신의 고위급 인사를 CEO 및 주요 경영진으로 적극 영입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타타 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는 Intel Foundry Services 사장이었던 Randhir Thakur를 CEO 겸 MD로 영입함. 특히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채용을 진행 중임. 현재 LinkedIn에는 CFO, 반도체 제조 운영 총괄 등 핵심 직책을 포함한 41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음.

타타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CG Semi, Kaynes SemiCon 등 기업들도 인도 반도체 미션(ISM)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현재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인도 최초의 반도체 팹과 OSAT 시설을 건설 중이며, 다른 기업들은 OSAT 시설(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에 집중하고 있음. 총 4개의 반도체 시설 중 3곳이 구자라트에서 건설 중임.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봉 50~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팹(Fab) 관련 역할이 OSAT 시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보수적인 추정치'로 보고 있으며,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함.

글로벌 인재 영입 전문 기업 Korn Ferry의 Navnit Singh은 "모든 인도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탑(top)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며,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함.

자료원: 'Indian Semicon Cos Eye Global Talent', ET(3.18)

○ 미국 정부 계약 축소로 IT 컨설팅업체 타격.. 인도 IT 업계 영향은 제한적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정부 지출 절감과 자원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일부 연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하면서, 컨설팅 중심의 IT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그러나 인도 IT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미국 기반 리서치펌 Everest Group에 따르면,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은 미국 연방 정부의 연간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기업 매출에서 미국 연방 부문의 비율도 2% 미만임. 이를 감안하면,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IT 산업 중 연방 정부 계약에 노출된 금액은 100억 달러 미만이라는 계산이 나옴.

전문가들은 DOGE의 권한이 연방 계약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도 IT 기업들이 수주한 미국 정부 계약의 상당 부분은 주 및 지방 정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한편, 미국 연방 정부는 매년 약 600억 달러를 컨설팅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자료원: 'DOGE's Federal Spends Slash Unlikely to Bleed Indian IT Cos', ET(3.5)

○ 하이얼, 인도 에어컨·PCB 생산 확대.. 80억 루피 신규 투자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Haier)이 인도에서 에어컨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자 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80억 루피(약 9,168만 달러)를 신규 투자함. 하이얼 인디아 사장 NS Satish는 이번 투자가 향후 성장 준비, 수입 의존도 감소 및 현지 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번 투자는 내부 유보금과 외부 상업 차입을 활용해 조달되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정부 승인 요건을 규정한 '프레스 노트 3' 규정을 우회할 수 있게 됨.

하이얼 인디아는 이번 투자에 필요한 모든 현지 인허가를 이미 취득함. Satish는 "공급망 리드 타임이 기존 60~90일에서 25일로 단축될 것"이라며, 인도 내 생산 및 조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자료원: 'Haier & Higher: ₹800 crore Expansion Plan in Place', ET(3.10)

○ LG전자 인도법인, 인도 증시 IPO 승인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td)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공개(IPO) 승인을 획득함. 인도 자본시장 규제기관이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는 지난해 12월 IPO 관련 초안 서류를 제출했으며, SEBI는 각각 3월 13일에 승인을 완료함.

LG전자 인도법인은 IPO를 통해 모회사인 LG전자가 보유한 1억 180만 주(15% 지분)를 매각할 계획임. IPO 총 규모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약 1,500억 루피(약 17억 3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번 IPO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L)이 지난해 10월 상장한 이후, 인도 증시에 진출하는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100% 구주 매출(Offer for Sale, OFS)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량 모회사인 LG전자로 유입될 예정임.

자료원: 'LG Electronics, Innovision get SEBI nod to launch IPOs', BL(3.19)

○ **인도, 제약 공급망 강화 위해 기술위원회 출범.. 중국 의존도 줄이기 나서**

인도 정부가 제약 제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섬.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약부(DoP) 관계자는 "이번 기술위원회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제약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최근 제약부는 주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 및 제약 로비 단체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킴. 이번 조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IPEF는 역내 경제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국 다자간 경제 협력체임.

IPEF 협정은 네 가지 핵심 분야를 다루며, 그중 하나가 공급망 강화임.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광물, 화학, 헬스케어-제약 등 네 개 부문별 행동 계획 팀이 구성되었으며, 각 부문별로 다른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음. 제약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위원회는 헬스케어-제약 부문의 행동 계획 팀을 위한 전략 수립, 의제 설정 및 로드맵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협정은 각국 경제 내 기업 간 경제-상업-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공급망 위원회(SCC)가 출범했으며, 미국이 의장을, 인도가 부의장을 맡고 있음. 새롭게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올해 안에 공급망 위원회에 행동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자료원: 'Panel to Suggest Ways to Strengthen Supply Chains, Cut Dependence on China', ET(2.28)

○ **Sun Pharma, 美 Checkpoint Therapeutics 3.55억 달러에 인수..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

인도 제약사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이하 선 파마)가 미국 면역항암제 및 표적 항암 치료 기업 Checkpoint Therapeutics(이하 체크포인트)를 3억 5,5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이번 거래는 2025년 2분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 파마는 체크포인트의 발행 주식을 주당 4.10달러 현금으로 매입함. 이는 3월 7일 기준 체크포인트의 종가 대비 66%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임. 또한, 체크포인트 주주들은 유럽 일부 시장에서 '코시벨리맵(cosibelimab)'이 규제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0.70달러의 추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이번 인수를 통해 선 파마는 체크포인트의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 치료제 UNLOXCYT(cosibelimab-ipdl)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됨. UNLOXCYT는 전이성 또는 국소 진행성 피부 편평세포암(cSCC) 치료를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 항-PD-L1 치료제임. 선 파마 회장 겸 대표이사 Dilip Shanghvi는 "UNLOXCYT와 선 파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cSCC 환자들에게 중요한 신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선 파마는 지속적으로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해 옴.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스위스 제약사 Philogen과 항암제 'Fibromun'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내 UNLOXCYT의 시장 기회를 연 10~16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만약 이 치료제가 시장 점유율 15~20%를 차지할 경우, 이번 인수는 선 파마에 있어 성공적인 투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자료원: 'Sun Pharma to acquire US-based Checkpoint', BS(3.11)

○ 인도 비만을 급증.. 모디 총리, '심각한 문제' 경고

모디 총리는 최근 대중 집회에서 인도인의 비만을 급증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는 2050년까지 인도인의 약 3분의 1이 비만에 시달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민들에게 식용유 소비를 10% 줄일 것을 당부한 바 있음.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인(25세 이상)과 아동·청소년(5~24세)의 비만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함.

인도 내 아동·청소년 비만 인구는 1991년 275만 명에서 2021년 1,429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2,6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성인 비만 인구도 1991년 576만 명에서 2021년 4,678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50년에는 1억 7,37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인도의 과체중 및 비만 성인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50년까지 150.42% 증가해 4억 4,9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인도의 식용유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4~15년 2,305만 톤(mt)에서 2023~24년 2,783만 톤(mt)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입산 식용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인도 성인의 신체 비활동 비율은 2016년 34%에서 2022년 49.4%로 증가함. 특히 아동·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2016년 기준 여아의 76.3%, 남아의 71.8%가 신체 활동 부족 상태로 조사됨.

자료원: 'Obesity, a pandemic in the making, may hit India hard by 2050', BS(3.17)

○ 일라이 릴리, 체중 감량 신약 '마운자로' 인도 출시 임박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의 기대작인 체중 감량 및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가 몇 주 내로 인도 내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임.

전 세계적으로 마운자로와 같은 계열의 치료제인 Novo Nordisk의 Ozempic/Wegovy는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도 내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들도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원하고 있다고 당뇨병 전문의들은 전함.

마운자로는 2.5mg/바이알이 3,500루피(약 40.6달러), 5mg/바이알이 4,375루피(약 50.7 달러)로 책정됨. 일라이 릴리 대변인은 "인도 맞춤형 가격 정책은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노력"이라고 밝힘.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하는 처방 의약품으로, 식욕 조절을 통해 음식 섭취량과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지방 대사 조절 기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도에는 약 1억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 심장병, 수면무호흡증 등 200가지 이상의 건강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일라이 릴리는 설명함.

자료원: 'Eli Lilly launches much-awaited weight-loss drug Mounjaro in India', BL(3.21)

○ **FY24 인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12.1%..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FY24 기준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가 인도 전체 전력 생산의 12.1%를 차지하며, FY15의 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 부문이 전체 전력 소비의 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소비 부문으로 기록됐으며, 이어 가정용(24%), 농업(17%), 상업(8%) 순으로 나타남.

인도는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FY24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9%를 석탄이 차지함. 전력 부문이 석탄 소비의 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소비를 기록함.

자료원: 'Renewables' Share in Electricity Generation Surges to 12% in 9 Years', ET(3.26)

○ **인도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생산 관련 수입 관세 면제 요청**

인도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로비 그룹이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장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정부에 요청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태양광 제조업 협회(Indian Solar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일정과 로드맵도 함께 요구함.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 및 에너지 집약적 상류 제조업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대량 덩핑과 가격 조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현재 인도는 승인된 모델 및 제조업체 목록(ALMM)과 관세 보호 조치 덕분에 태양광 모듈 제조에서 이미 자급자족 상태에 이르렀다고 관계자는 전함.

ALMM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는 승인된 목록 내에서 태양광 자재를 조달해야 함. 또한, 2026년 6월부터 태양광 셀에도 ALMM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 생산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협회는 인도가 FY27까지 태양광 셀 제조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Solar Gear Makers Seek Duty Exemption on Capital Goods', ET(3.10)

○ **인도, 바이오에탄올 혼합률 20% 돌파 추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도가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 비율을 기존 목표치인 2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를 위해 정부 싱크탱크인 NITI Aayog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Hardeep S Puri 석유부 장관이 밝힘.

Puri 장관은 Guwahati에서 열린 'Advantage Assam 2.0' 비즈니스 서밋에서 "이미 19.6%의 혼합률을 달성했으며, 내달 중 20%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함. 그는 "당초 2026년까지 20% 혼합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20% 이상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의 바이오에탄올 혼합 연료 생산 능력은 연간 170억 리터이며, 이 중 150억 리터가 사용되고 있음.

또한, Puri 장관은 인도가 연간 1,500억 달러를 다양한 형태의 연료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며, 그린수소가 아직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라고 지적함. 그는 “현재 그린수소 가격이 4.5달러 수준이지만, 이를 2.5달러로 낮출 수 있다면 연료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통적인 연료에서 그린수소로의 대규모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모든 국가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연 6~7% 성장하는 인도 경제에는 연료가 필수적이며, 현재를 견뎌야 깨끗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함.

Puri 장관은 인도의 모든 화석연료 생산 기업들이 2045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면 이는 경제 둔화의 신호”라며 “현재 인도는 하루 55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650만~7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E&P)과 관련해, Puri 장관은 “인도의 원유 생산량이 2030년까지 500만 톤에 이를 것이며,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인도 경제 규모가 현재 4조 달러에서 7~10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그는 “Shell, BP, Chevron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논의 중이며, 이들 모두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끝으로, Puri 장관은 OALP(Open Acreage Licensing Program)를 통해 인도의 약 350만km² 규모의 퇴적 분지 중 100만km²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그는 “이미 OALP를 통해 20만km²를 개방했으며, 9차 입찰에서는 전체의 38%가 해당 지역에서 나왔다”며 “10차 입찰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 ‘India looking to increase ethanol blending with petrol to over 20%: Puri’, BL(2.27)

○ 일본 기업들, 인도 그린암모니아 사업 투자 모색.. MOU 체결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에서 추진 중인 그린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번 협약에는 IHI Corporation, Hokkaido Electric Power Co.,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Inc., shipping major Mitsui O.S.K. Lines, Ltd., Inc., Mizuho Bank, Ltd., Tokyo Century Corporation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아려짐.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ACME Group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오디샤주에 새로운 그린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당 시설은 연간 약 40만 톤의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일본 내 전력회사 및 화학 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임.

암모니아는 비료 및 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동시에, 연소 시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특히 발전소 및 선박 연료로 활용할 경우 탈탄소화(decarbonization)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암모니아 생산, 운송, 활용에 대한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협력 및 개발 지원이 필수적임.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투자 참여 여부를 평가할 계획임.

자료원: 'Japanese consortium to set up green ammonia plant in Odisha by 2030', BL(3.26)

기 타

○ 우크라이나,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 인도 2위로 밀려나

우크라이나가 2020~202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로 떠오르며, 기존 1위였던 인도를 제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글로벌 무기 수입 비중은 8.3%로 집계됐으며, 우크라이나는 8.8%를 기록하며 더 높은 수치를 보임.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이 2015~2019년 대비 약 100배 증가했다고 분석함. 이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전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됨.

인도는 여전히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이지만, 2015~2019년과 비교하면 2020~2024년 무기 수입량이 9.3% 감소함. 보고서는 "인도의 국방산업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체 무기 개발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함.

이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Aatmanirbhar Bharat(자립 인도)' 정책의 영향으로 보임. FY24년 인도의 국방 생산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1조 2,700억 루피(약 1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25% 증가한 수치임. 또한, FY26년 국방자산 획득 예산 1조 4,900억 루피(약 171억 달러) 중 75%에 해당하는 1조 1,150억 루피(약 128억 달러)가 국내 조달에 배정되면서 인도의 국방 자급률 확대 기조를 반영함.

보고서는 인도의 무기 공급국 비중에도 변화가 있다고 분석함. 2020~2024년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은 여전히 러시아(36%)였지만, 이는 2015~2019년(55%), 2010~2014년(72%)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임. 반면, 인도는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등 서방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보고서는 향후 인도의 주요 무기 도입 계약이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한편, 2020~2024년 세계 5대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 순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무기 수출의 72%를 차지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 중국, 독일의 수출은 감소함. 특히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5~2019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섬.

자료원: 'Ukraine overtakes India as top arms importer', BS(3.11)

○ 2024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 인도, 여전히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

스위스 기반 기술기업 IQAir가 발표한 '2024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5개국 중 하나로 꼽힘.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 도시 중 단 17%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0.6마이크로그램($\mu\text{g}/\text{m}^3$)으로 WHO 기준($5.0\mu\text{g}/\text{m}^3$)의 10배를 넘음. 다만, 2023년($54.4\mu\text{g}/\text{m}^3$)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대도시는 아쌈(Assam)주의 Byrnihat으로, 연평균 PM2.5 농도가 $128.2\mu\text{g}/\text{m}^3$ 에 달함.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연평균 $91.8\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한 수도로 조사됨.

보고서는 인도의 4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10대 도시 안에 포함됐다고 밝힘. 해당 도시는 ▲ Byrnihat($128.2\mu\text{g}/\text{m}^3$) ▲뉴델리($91.8\mu\text{g}/\text{m}^3$) ▲하리아나주 Faridabad ▲우타르프라데시주 Loni임.

세계 10대 오염 도시에는 ▲카자흐스탄 Karaganda ▲파키스탄의 Lahore, Multan, Peshawar, Sialkot ▲차드의 N'Djamena도 포함됨. 보고서는 "전 세계 138개국 중 126개국(91.3%)이 WHO의 연평균 PM2.5 기준($5\mu\text{g}/\text{m}^3$)을 초과했다"며 공기 오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강조함.

특히, PM2.5는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어린이는 생리학적·행동적 특성상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하다며 "흡입된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깊숙이 침투하고 혈류로까지 유입될 경우 장기 및 면역 체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4 Indian cities top world's 10 most polluted in 2024', BL(3.12)

④ 외국인투자유치

○ 인도, 230억 달러 '인센티브' 제도 종료.. "실망스러운 성과"

모디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230억 달러(1.97조 루피)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이는 일부 참여 기업들이 정책 확대와 생산 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함.

정부는 14개 시범 부문을 넘어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 마감 기한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명의 관계자는 밝힘. 폭스콘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약 750개 기업이 PLI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은 개별 생산 목표와 기한을 충족할 경우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음.

그러나 많은 기업이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으며, 일부 목표를 충족한 기업들조차 인센티브 지급 지연 문제를 겪음. 2024년 10월 기준, PLI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1,519억 3,000만 달러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37%에 불과함. 반면,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는 17억 3,000만 달러로, 할당된 예산의 8%에도 미치지 못함.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오히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5.4%에서 14.3%로 감소함.

정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종료가 제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 정부는 지난해 제약과 모바일폰 제조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PLI 정책의 효과를 강조함. 실제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6억 2,000만 달러의 인센티브 중 94%가 이 두 산업에 집중됨.

한편, 식품 산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 기준 미달과 최소 성장률 미충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한 관계자는 과도한 관료주의와 행정적 절차가 프로그램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또 다른 관계자는 대안으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공장 설립 투자 비용을 부분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를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임.

자료원: 'India's \$23 billion PLI scheme to rival China factories to lapse after it disappoints', The Hindu(3.25)

○ 인도 주(州) 간 투자 유치 경쟁 격화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등 인도 주요 주들이 투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본격화함. 특히 모바일 및 노트북 조립, 반도체, 전기차(EV),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음.

각 주정부는 자체적인 투자 유치 기관을 운영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을 도입하고 있음. 텔랑가나는 "매칭 또는 초과(meet or beat)" 정책을 통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Invest Karnataka 이니셔티브는 정기적으로 해외 대표단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진을 직접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음.

전문가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은 산업 성장,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이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음. P Mohindroo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 회장은 "각 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거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주정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또 다른 이유는 타밀나두와 카르나타카가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임. 특히 모바일 및 노트북 제조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음. 전자정보기술부(MeitY) 고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여성 노동자 유치에 강점을 보인다. 생산 공정이 안전하고, 식사 및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 안전 수준도 높은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함.

또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면 중소기업(MSME)과 부품 공급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점도 중요함. TeamLease의 Subburathinam P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 제조 공장이 설립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품 업체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분석함. 이러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각 주는 기업 친화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음.

자료원: 'States battle it out to attract investors', BS(3.3)

○ 인도, 보험 부문 FDI 확대.. 정책 보호 조치 병행 필요

Anantha Nageswaran 인도 수석경제고문은 보험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와 함께 점진적인 정책 보호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이는 FDI 증가의 혜택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난 화요일(3.4) 밝힘.

Sitharaman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 연설에서 보험 부문의 FDI 한도를 기존 74%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다만, 이 상향 조치는 보험사가 모든 보험료를 인도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또한, 기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와 조건을 검토하고 간소화할 계획도 함께 발표함.

현재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조치에는 △ 외국 국적자가 고위 경영진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인도 내 거주를 의무화해 관리·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기업을 막기 위한 일정 기간 최소 투자 유지 요건 △ FDI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 및 브랜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2000년 보험 부문이 개방된 이후 현재까지 유입된 총 FDI 규모는 약 8,284억 7천만 루피(약 95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인도의 보험침투율은 3.7%로, 세계 평균 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자료원: 'Policy safeguards needed along with FDI hike in insurance: CEA', BL(3.5)

○ 인도 순 해외직접투자(FDI) 감소.. 10개월간 11.5억 달러 → 1.4억 달러

인도의 순 해외직접투자(FDI)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4억 달러로 급감함. 이는 전년 동기(115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 증가와 인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RBI(인도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677억 달러로 전년(602억 달러) 대비 12.4% 증가함.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 및 철수 규모가 461억 달러로 전년 동기(369억 달러)보다 증가하면서 순 FDI 감소에 영향을 미침.

또한, 인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118억 달러에서 202억 달러로 급증하며, 순 FDI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RBI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으며, 그 뒤를 금융 서비스, 전력·에너지, 통신 서비스가 이음.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모리셔스, 미국, UAE, 네덜란드가 전체 FDI의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Net FDI dips to \$1.4 bn', BS(3.20)

⑤ 세제 및 규제 변화

○ 인도 대법원, 마감 이후에도 GST 신고 오류를 수정 가능하다고 판결

인도 대법원이 GST 신고에서 발생한 인적 또는 산술적 오류를 정정할 권리를 사업체에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선의의 실수에 대한 수정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받았음.

Sanjiv Khanna 대법관과 Sanjay Kumar 대법관으로 구성된 판사단은 CBIC가 제출한 특별 항고를 기각하며,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고 공정하며, 정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 해당 사건(CBIC vs M/S Aberdare Technologies)에서 봄베이 고등법원은 기업이 GST 신고서를 전자적으로나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대법원은 CBIC에 대해 “GST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규정 및 기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실수로 인해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가 거부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구매자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힘.

재판부는 “인적 오류와 실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세무 당국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나 산술적 실수를 수정할 권리는 사업 운영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또한,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이유로 오류 수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도구이며, 필요하다면 조정될 수 있다”라며 CBIC의 항소를 기각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GST법 하에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ITC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중요한 구제책을 제공한다고 평가함.

자료원: 'GST errors can be fixed after deadline: SC', ET(3.27)

○ GST 협의회, 상업용 드론 5% 단일세율 검토

GST(상품서비스세) 협의회가 다음 회의에서 모든 상업용 드론에 대해 5%의 단일 GST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이 전함. 이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드론)의 분류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업계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급성장하는 인도 드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장조사 업체 Tracxn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약 488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있으며, 총 5억 1,8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임.

현재 드론에 적용되는 GST 부과율은 HSN 코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 상업용 드론은 HS 코드 8806(항공기)로 분류되어 5%의 GST가 적용되지만,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은 8525(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되어 18%의 GST가 부과됨. 개인용 드론의 경우, HS 8806으로 분류되지만 28%의 높은 GST율이 적용됨.

업계 전문가들은 드론을 ‘공중 이동(Airborne Mobility)’이라는 본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드론 제조업체 및 업계 대표들은 GST 협의회에 공식 요청을 제출해, 카메라가 '영구적으로' 장착되지 않은 드론을 HS 8806으로 분류하고, 모든 상업용 드론에 5%의 단일 GST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함. 이들은 높은 세율이 드론 혁신을 저해하고, 농업, 인프라 모니터링, 보안 분야에서 드론 채택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자료원: 'Uniform 5% rate on drones for business use on agenda', BS(3.21)

○ 인도, '원산지 증명서' 대신 '원산지 증빙' 제출 요구

인도 재무부는 2020년 제정된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Amendment Rules 2020'을 개정했으며, 개정 규정은 3월 18일부터 발효됨.

이제부터 수입업자는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위해 기존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대신 '원산지 증빙자료(Proof of Origin)'를 제출해야 함. 인도가 향후 체결할 FTA 협정에 자율발급(Self-Certification) 방식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한-인도 CEPA, 인도-일본 CEPA, 인도-ASEAN FTA 등 기존 FT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 (예: 한-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직접 발급. 이는 특정한 문구가 표기된 원산지 증빙자료로도 갈음할 수 있음 (예: 한-EU FTA)

자료원: Submit 'proof of origin' instead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import tariff, says FinMin', BL(3.21)

○ 인도, 신발 품질 규제 완화 추진

인도 정부가 신발 수입에 대한 품질 규제 완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수입 장벽 문제를 지적한 점과, 프리미엄 신발 시장에서 공급난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인도는 2023년 7월 가죽 신발, 8월 스포츠 신발, 샌들, 클로그, 슬리퍼 등 다양한 신발 제품에 대한 새로운 품질 관리 명령(QCO)을 도입함. 이에 따라 신발 제조업체는 인도표준국(BIS)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만 제품을 조달해야 했으나, 해외 공장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수입이 제한되었고, 프리미엄 신발 시장의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BIS가 본격적으로 인증 절차를 시작했으며, 공장별 심사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다만, 중국과 중국계 공장은 여전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대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공장들은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미국에 본사를 둔 Nike는 인도 내 사업 운영을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BIS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됨. 결국 Nike는 최근 열린 모디-트럼프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승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내 프리미엄 신발 생산 능력이 부족하며, 고급 신발 제조에 필요한 첨단 기계와 숙련된 기술도 아직 미비하다"라고 지적하며, BIS 승인을 통한 해외 공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임.

Woodland의 H Singh은 "일부 프리미엄 신발의 생산을 인도로 이전했지만, 생산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힘. 실제로 인도의 신발 수입액은 '22년 9억 2,034만 달러에서 '23년 2억 9,976만 달러로 급감함.

한 글로벌 브랜드의 CEO는 "우리는 지난 6~8개월 동안 사실상 제품이 없는 상태였다"며, "BIS가 이달부터 해외 신발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자료원: 'Shoe Kings Bare their Soles to India's BIS', ET(2.27)

◦ GST 위원회, 자연재해 대비 특별 보상세(cess) 도입 검토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위원회가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그룹(Group of Ministers, GoM)을 구성함. 또한 GST 수익 분석을 위한 기존 장관 그룹을 재편함. 이 같은 조치는 2024년 12월 21일 열린 GST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권고에 따른 것임.

이번 GoM의 임무(Terms of Reference, ToR)는 총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각 주(州)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 재난 보상세(cess) 부과에 대한 통일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됨. 또한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

GoM은 이 보상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될 것인지도 분석할 계획임. 더불어, B2B(기업 간 거래) 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 어느 거래 유형에 적용할 것인지, 혹은 양쪽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임. 또한, 주 정부가 GST 체제 내에서 자연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특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됨.

자료원: 'GoM to examine States' demand for levying natural calamity cess', BL(3.7)

◦ GST 국내 수입 증가.. 다음 GST 위원회 회의에서 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

최근 국내 GST 징수 증가로 인해, 다음 GST 위원회 회의에서 세율 조정(rate rejig)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짐. GST 위원회는 3개월마다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회의는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임.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지난 토요일(3.8) "세율 및 세금 구간(slab) 조정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다음 GST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GST 위원회는 2021년 9월 세율 구조 개편 및 세금 구간 조정을 위한 장관급 그룹(GoM-Group of Ministers)을 구성한 바 있음.

현재 GST 시스템은 ▲5% ▲12% ▲18% ▲28%의 네 가지 일반 세율과 ▲0% ▲0.25% ▲1% ▲3%의 네 가지 특별 세율이 존재함. 또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GST 28%에 추가로 1~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보상세(cess)'가 적용되고 있음.

자료원: 'GST Council may rejig rates', BL(3.10)

◦ 4월 1일부터 여러 주에 지점을 둔 기업에 ISD 메커니즘 의무화

오는 4월 1일부터 상품서비스세(GST) 시스템에 큰 변화가 적용됨. 'Input Service Distributor(ISD) 메커니즘'이 의무화되면서, 주 정부가 개별 지점에서 조달한 공통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이번 변경 사항은 2024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CGST Act에 반영됨. ISD 메커니즘은 여러 주에 지점을 보유한 기업이 본사나 특정 지점을 통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점들에 배분하는 제도임. Trilegal의 Samsuddha Majumder는 "ITC는 각 지점의 매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함.

Deloitte의 Harpreet Singh은 ISD 의무화를 대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7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함.

1. ISD 등록: 입력 서비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본사 또는 특정 지점을 선택한 후 ISD 등록을 완료해야 함.
2. 공통 비용 식별: 본사가 모든 지점을 위해 지출하는 공통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3. 벤더 목록 조정: 공통 비용과 관련된 공급업체를 ISD 등록 하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4.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변경: ISD 등록 후, 해당 공급업체들에게 앞으로 ISD 등록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안내해야 함.
5. IT 시스템 업데이트: 조달 모듈에서 구매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 등 IT 시스템을 조정해야 함.
6. 사내 교육 실시: ISD 세금계산서 입력, 벤더 관리, 신규 벤더의 ISD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함.
7. 정기적 신고 및 조정: ISD 등록 이후 GSTR-6A와 입력세액공제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각 지점에 세액을 배분하며, 매월 GSTR-6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자료원: 'ISD mechanism must for firms with branches in multiple States from Apr 1', BL(3.17)

◦ 인도 정부, 디지털 경쟁법(DCB) 도입, "서두르지 않을 것"

인도가 오랫동안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 경쟁법(Digital Competition Bill, DCB) 도입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Harsh Malhotra 기업부(MCA) 국무장관은 17일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글로벌 모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인도의 디지털 규제 환경에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경쟁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정부가 디지털 경쟁법(DCB)을 오는 몬순(Monsoon) 국회 회기에서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Malhotra 장관은 "아직 확정하기 이르다"고 답함.

그는 "MCA 웹사이트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 대해 이미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제안이 제출되었으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힘. 또한, 전자정보기술부(MeitY)에서 진행한 독립적인 이해관계자 협의 보고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경쟁법(DCB)은 경쟁위원회(CCI)에 디지털 시장 내 '게이트키퍼' 기업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이 법안은 특히, 전자상거래, 검색 엔진, 앱 생태계 등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이동성, 비차별적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ex-ante framework)를 신속히 도입하려던 초기 계획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이는 2022년 12월 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보고서 발표 이후, 2023년 2월 MCA가 디지털 경쟁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검토에 나섰기 때문임.

자료원: 'India not to rush into enacting Digital Competition Bill: Govt', BL(3.17)

○ SEZ 및 EOU에서 2월 5일까지 수출한 물품, RoDTEP 혜택 대상에 포함

올해 2월 5일까지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전용단지(EOU)에서 수출된 제품에 대해 RoDTEP(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환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당초에는 해당 수출자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RoDTEP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음.

RoDTEP(Remand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제도는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해 부과된 중앙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관세, 세금, 부담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현재 RoDTEP 환급률은 0.3%에서 4.3% 사이로 책정돼 있음.

3월 20일자로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이 발행한 공지에 따르면, SEZ, EOU, 그리고 사전승인제도(AAs)를 통한 생산제품의 수출에 대한 RoDTEP 지원이 2월 5일까지 연장됐음. 다만, 2월 6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수출품은 더 이상 RoDTEP 지원 대상이 아님을 DGFT는 명확히 밝혔음.

국내관세지역(DTA; SEZ 및 EOU 외의 일반 지역)에서 이루어진 수출에 대한 RoDTEP 혜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 적용됨.

수출업체는 RoDTEP 제도의 환급률과 적용 기간을 향후 5년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Exports till Feb 5 from SEZs, EOUs eligible for RoDTEP scheme benefits', BL(3.24)

○ 삼성전자, 인도서 510억 루피 세금 및 벌금 부과.. 법적 대응 검토

삼성이 인도 법인의 수입 통신 장비에 대한 관세 회피 혐의로 510억 루피(약 6억 100만 달러)의 세금 및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삼성은 공식 입장에서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며, 이번 사안은 세관의 상품 분류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설명함. 이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금 부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에 이미 발행된 '사전 통지(show cause notice)'의 후속 조치임.

해당 관계자는 "2023년 1월 첫 번째 통지를 보냈으며, 삼성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이후 사전 세금 부과 통지(pre-demand notice)를 발송했다고 설명함.

당초 2023년 통지에서 부과된 금액은 120억 루피(약 1억 4천만 달러)였음. 삼성은 당시 통신탑(telecom towers) 장비 수입 시 부적절한 품목 분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삼성은 해당 장비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2025년 1월 8일 인도 세관 당국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인도 세관 당국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조치에는 삼성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Samsung Weighs Legal Options on ₹5,100 crore Customs Demand', ET(3.26)

⑥ 무역협상 · 대외관계

○ 영국-인도 경제 협력 강화.. 1억 파운드 규모 신규 투자 및 수출 계약 체결

영국과 인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 장관들이 인도를 방문해 총 1억 파운드(약 1억 2,7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및 수출 계약 17건을 발표함. 이번 계약은 첨단 기술과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영국 대표단을 이끈 Jonathan Reynolds 산업통상부 장관과 Poppy Gustafsson 투자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국-인도 간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함.

Reynolds 장관은 “첨단 기술과 생명과학 산업은 영국 경제의 핵심 성장 부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영국 기업들이 인도의 유망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영국 경제에 수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인도의 보험 산업 개방임.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보험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한도를 기존 74%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영국 보험사들이 인도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됨.

이에 대해 Gustafsson 장관은 “인도의 신규 투자는 영국 정부의 '변화 계획(Plan for Change)'이 인도 기업들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영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야심 차고 협력적인 무역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이번 방문에서 영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가 공식화됨. Reynolds와 Gustafsson 장관은 FTA가 양국 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자료원: 'UK announces investments worth £100 million in India', BL(2.27)

○ EU 집행위원장, 인도와의 협력 강화 강조.. 美 관세 위협 속 전략적 동맹 확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칭하며, 뉴델리에서 자이상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유럽과 인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

자이상카르 장관은 회담 후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 뉴델리에서 EU 집행위원장과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에서 인도 장관들과 EU 집행위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은 양측이 관계 심화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8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안보, 환경 규제, 방산 협력, 공급망 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계획임.

EU 대표단의 이번 인도 방문은 양측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루어짐. 트럼프는 수요일(2.26) EU에 대해 자동차를 포함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인도 역시 오는 4월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호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의 무역 조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형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녀는 SNS를 통해 “모디 총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이번 방문에서는 EU-인도 무역기술위원회(TTC) 2차 회의도 열릴 예정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업 및 상호 운용성, 핵심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무역 협력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원: 'EU Prez discusses re-energising ties with "trusted friend" India', BL(2.28)

○ 인도, 미·EU·영과 FTA 협상 박차.. 관세 수입 감소 불가피

인도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선진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FY26 기준 2.1% 증가한 2.4조 루피(약 275억 달러)로 예상된 관세 수입이 더욱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FY25 기준, 일본·한국·아세안(ASEAN)과 체결한 FTA에 따른 관세 감면으로 인해 인도는 9,417억 2천만 루피(약 108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포기함. 특히, 아세안과의 FTA에 따른 세수 감소가 3,787억 5천만 루피(약 43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일본(1,203억 8천만 루피; 약 13억 8천만 달러), 한국(1,033억 5천만 루피; 약 11억 9천만 달러) 순으로 뒤를 이음.

현재 인도는 미국과 향후 7~8개월 내에 다부문·상호호혜적 양자 무역 협정(B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EU와는 오랜 기간 지연된 FTA 협상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영국과의 협상은 별도 마감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서두르지는 않되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인도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FTA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관세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글로벌무역연구소(GTRI) 설립자 Ajay Srivastava는 “인도의 최혜국(MFN) 평균 관세율이 약 12%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도가 감면해야 할 관세 규모가 크다”고 설명함.

Srivastava는 또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같이 다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80~90%를 수입하고 있다”며 “반면 인도는 현재 약 25%에 불과하지만, 미·영·EU와 FTA를 체결하면 60~6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FTA tariff concessions cost India ₹94,172 crore in FY25', BS(3.5)

○ 인도-EU, FTA 협상 본격화,, QCO 완화·에너지 협력 논의

인도와 유럽연합(EU)은 금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10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품질 관리 명령(QCO) 완화(BIS 등 인증) 및 에너지·원자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EU는 인도의 QCO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는 에너지 및 원자재 협력에 대해 제한적인 약속 없이 협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양측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협상에서는 EU가 요구하는 자동차 및 주류 관세 인하와 인도의 데이터 보안국 인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양측은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함.

이번 협상은 최근 모디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올해 안에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EU는 인도의 가구, 타이어 품질 규제, 수입 라이선스, 투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태임. 하지만 9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세, 자동차·주류 관세, 노동집약적 산업 규제, 환경·노동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더딘 상황임.

EU는 인도의 자동차 및 주류 수입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 특히, 인도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EU의 지속가능성 및 노동 기준 요구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

반면, 인도는 자국 IT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EU가 인도를 데이터 보안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체계에서 데이터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임.

농업은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꼽힘. EU의 복잡한 농업 관세 시스템은 비종가관세(NAV, non-ad valorem tariff) 적용으로 인해 인도 농산물 수출의 실질적인 관세율을 높이고 있음. NAV는 제품 가격이 아닌 원재료 함량이나 강도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임.

자료원: 'French shipping major CMA CGM to play a key role in IMEC', BL(2.14)

○ 인도-뉴질랜드, 1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인도와 뉴질랜드가 10년 만에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함. 양국은 과거 낙농업 부문의 협정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인도는 자국 낙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협정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이번 협상 재개는 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의 인도 방문(3월 16~20일)을 계기로 이뤄짐. 특히, 글로벌 무역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함.

자료원: 'India-New Zealand to resume FTA negotiations after a decade's lull', BL(3.17)

⑦ 지재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도 IP센터 제공

◦ 인도, 3대 주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글로벌 톱 10 진입

인도는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 3대 주요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2023년도에 글로벌 톱 10에 진입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음. 이는 인도의 혁신 및 IP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상표출원) 인도는 2023년 상표출원 건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1%의 증가율을 보였음. 전체 출원의 약 90%가 인도 국내출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건(21.9%), 농업(15.3%), 의류(12.8%) 산업이 주요 출원 분야임. 또한, 인도 상표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등록된 상표(320만 건 이상)를 보유하고 있음.

(특허출원) 인도는 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하며 총 64,480건의 특허출원을 하였음. 이중 인도 국내출원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5.2%를 차지하였음. 또한,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149.9% 더 많은 특허가 등록되어 인도의 빠르게 진화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보여줌.

(산업 디자인 출원) 인도는 산업 디자인출원 분야에서도 톱 10에 진입했으며, 작년대비 36.4% 출원이 증가하였음. 산업 디자인출원의 주요 3대 다출원 분야는 섬유/악세서리, 도구/기계, 건강/화장품으로 전체 디자인출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디자인의 출원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제품의 미적 및 기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India Among Top 10 Nations In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Report', BW(2024.11.13.)

◦ 델리 고등법원, 위조 제품 제조업체에 110만 루피 배상 명령 - Puma 승소

(소송 배경) 델리 고등법원은 Puma의 상표 및 로고를 무단 사용한 제조업체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0만 루피(약 1,800만 원) 배상을 명령함.

(Puma의 주장) 1948년부터 Puma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해온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1977년 인도에서 상표 등록 후 1980년대부터 사용해왔다고 설명함. Puma 상표는 2019년 '주지상표'(well-known trademark)로 공식 인정받았음. 2022년 10월 동(東)델리에서 대량의 위조 Puma 신발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 제조 공장을 특정한 후 소송 제기하였음.

(법원의 판결 근거) 피고가 Puma의 상표, 로고, '폼 스트립(Form Strip)' 로고를 완전히 복제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함. 현장 조사 결과, 아디다스, 나이키, 리쿠퍼(Lee Cooper) 등 여러 브랜드의 위조 제품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남. 2023년 루이비통(Louis Vuitton) 판결을 인용하며, 위조 제품 유통이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기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법원 판결) 피고가 Puma의 주지상표를 명백히 위조했음을 인정하고,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Puma에게 90만 루피의 소송비용 + 20만 루피의 손해배상금, 총 110만 루피 지급 명령하고, 피고의 위조 제품 생산·유통을 영구 금지함.

자료원: 'Trademark Infringement: Delhi High Court Directs Manufacturer Of Counterfeit Products To Pay ₹11 Lakh To Puma', Live Law(2025.3.10.)

② 이슈 포커스

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인도에 유리한가?

3월 5일, 인도의 외교장관 수브라마냐삼 자이상카르는 자신의 진가를 발휘함.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에서 그는 인도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서양의 이중잣대를 꼬집는 날카로운 한마디로 받아쳤다. 그러나 그의 비판 대상 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없었음.

전 세계 정치인들이 '트럼프 2.0'을 이해하려 애쓰는 가운데, 인도는 한발 앞서 나가고자 함. 비동맹 외교 노선이 미국의 새로운 세계관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아울러 인도는 또 다른 전략도 연마 중인데, 기존 입장을 트럼프식 어휘(MAGA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것임.

자이상카르 장관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모두 트럼프의 1기 임기 때 이미 그와 교류한 바 있음. 당시 두 '강한 남자들'은 인도 구자라트와 미국 텍사스에서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 함께 참석하며 친밀감을 드러냈음. 2025년 2월 백악관에서의 최근 회담에서도 이 분위기는 이어졌음. 모디 총리는 그 자리에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영감을 받아 "MIGA(인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만들었다고 발표함. 자이상카르의 채텀하우스 연설은 이러한 새로운 역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냈음.

우선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인도의 오래된 비동맹 정책(현재는 '다자 정렬'로 표현)과 비슷함. 과거 미국은 인도가 강한 안보 파트너십을 꺼리는 데에 답답함을 느꼈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및 에너지 협력이 바이든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음.

하지만 조약 동맹의 중요성이 줄어든 지금, 조건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짐. 물론 트럼프는 미국·호주·일본·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가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하길 요구해왔고, 이는 인도에 불편한 부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상카르는 쿼드를 "각자 공정하게 부담하는 이해관계"라고 설명하며, "무임승차자는 없다"고 주장함. 이는 은근히 NATO와 비교한 것임. 정책 변화나 예산 증액을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식 '무임승차' 언어를 빌려 인도를 유럽보다 단순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묘사한 것임.

또 다른 측면은 소수자 권리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이 대거 폐지되었음. 이번 자이상카르 장관의 연설은 그 지형이 바뀌었음을 보여줌. 그는 미국 내 문화전쟁의 언어를 활용해, 인도 내 무슬림 2억 명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토권주의"와 "정체성 로비"가 소수자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함.

앞으로도 트럼프 진영과 모디 진영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음. 미국 국가정보국장 톨시 개버드와 부통령 JD 뱅스가 곧 인도를 방문할 예정임. 개버드는 미국 역사상 첫 힌두교도 정보국장이며, 뱅스의 아내 우샤 뱅스는 인도계임.

하지만 세계관의 유사성, 새로운 공통 언어, 개인적 친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도 관계는 결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전쟁은 인도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는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기를 원하지만, 인도는 자국의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싶어함.

서구 중심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극화 세계'를 주장해온 인도는 마침내 자국이 원하던 형태의 세계를 얻고 있는지도 모름.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시아 내 불안정, 군비 경쟁,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면, 인도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음.

자료원: 'India is benefiting from Trump 2.0?', The Economist(3.13)

② 늙어가는 인도? 2050년엔 60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21%(3.5억명)에 달할 전망

1950년 당시 인도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41.2세로, 세계 평균보다 5년 낮았음. 2023년 기준, 인도인의 기대수명은 72세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년 낮은 수준임.

공공보건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음. 인구 14억 명 중 절반이 29세 이하로, 이들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세대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이 인구 구조는 인도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연평균 0.7%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함.

하지만 이 성공은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음.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 2050년에는 이 수치가 2배로 늘어 전체 인구의 약 21%인 3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임. 이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임.

앞으로 25년간 인구 보너스 효과는 줄어들어 GDP 성장 기여도는 연 0.2%포인트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MGI의 아누 마드가브카르는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세대뿐이다. 그 이후에는 북미처럼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갖게 되겠지만, 1인당 GDP는 훨씬 낮은 상태일 것"이라고 전망함.

만약 인도가 충분히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게 된다면, 선진국이 되는 꿈에서 멀어지게 됨. 더 큰 문제는 노년층 개인들에게 직접 닥칠 어려움임. 현재 인도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2.0 미만)이며, 지금은 노인 1명당 9.8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있지만, 205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2100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1.9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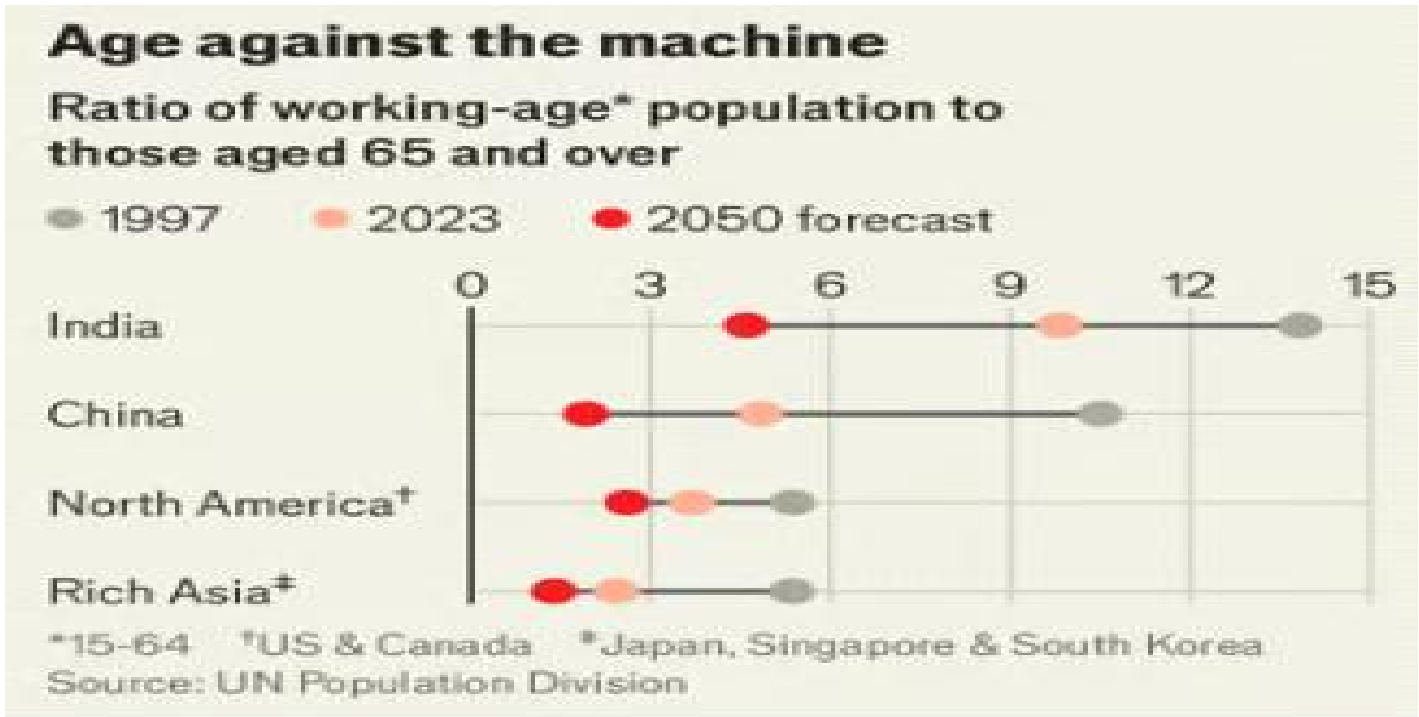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노인을 부양할 성인 인구는 줄고, 저축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노인들이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겪을 가능성이 큼. 공공 의료서비스는 부족해지고, 젊은 세대는 노인 부양으로 인해 소비와 저축,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음.

특히 여성 노인층은 더 취약함.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들은 배우자를 잃으면 사회적 고립을 겪음. 인도 보수 지역에서는 미망인이 흰 옷만 입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함. 법적으로는 남편의 유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임.

정부는 고령 인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 노인과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독립적으로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연금을 받기 위해 매년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음. 출생·사망 등록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장애물임.

정부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예방 치료나 외래 진료는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하고 있음. 특히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임.

여기에 사회 구조의 변화도 압박을 더하고 있음.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핵가족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었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은 외로움, 고립, 우울증에 시달리게 됨.



자료원: 'The trouble with ancient Indians' The Economist(2.27)

③ 인도에서 기회를 잡은 스타링크

캐나다에서 계약 취소를 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유럽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미국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Starlink)는 인도에서 커다란 호재를 맞이함. 2월 중순, 인도의 두 대형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는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사 수익 명의 고객에게 스타링크의 고속 위성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오랫동안 인도 진출을 추진해왔지만, 기존 통신사들과 정부 규제의 저항에 가로막혀 있던 스타링크와 모회사 스페이스X(SpaceX)에게 돌파구가 생긴 것임.

다만, 두 통신사는 "이번 협력은 스타링크가 인도 내 공식 판매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힘. 미국 주재 인도 대사관은 이 허가의 상태에 대해 "검토 중이며 기밀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함.

왜 인도는 스타링크에 관심을 보였을까?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중 75%에 해당하는 9억7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서방 기업에 대해 폐쇄적인 중국과 달리, 인도는 최근 들어 스타링크의 진출에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배경도 있어 보임.

우주정책 전문가 아디티야 라마나탄은 "스타링크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위성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응하거나, 필요 시 인터넷 차단이 용이한 '유연한' 파트너로서 스타링크가 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함.

또한, 스페이스X의 CEO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라는 점도 인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음. 모디 총리는 트럼프 2기 취임 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한 정상 중 한 명으로, 백악관에서 머스크와 직접 만나 우주,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음.

자료원: 'India Opens Up for Trump's Tech Backers' Foreign Policy(3.12)

④ 인도 탄소배출권거래제(CCTS) 2025년 9월부터 단계적 도입

인도 에너지효율청(BEE)의 국장 사우라브 디디는 2025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 탄소시장 행사 'Prakriti 2025'를 출범했음. 이는 인도 정부가 주최한 최초의 국제 탄소시장 행사였음.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경부터 탄소시장 구상을 시작함. 2022년 제도 틀을 마련한 이후,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CCTS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의무제도(Compliance Regime)이며, 다른 하나는 자발적 상쇄제도(Voluntary Offset Market)임.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ETS처럼 획일적인 배출량 총량 규제가 아니라, 단위당 배출강도 기반 방식*으로 설계됐음. 이는 인도의 개발도상국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며, 국제 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설계였음.

*유럽연합처럼 전체 배출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제품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적게 배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

의무제도는 정부가 정한 단위당 배출 강도 목표를 산업체가 준수해야 함.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탄소배출권을 부여받고,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자발적 상쇄제도는 산림, 재생에너지, 농업 등 10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정부에 등록된 경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이 두 시장은 분리 운영되며, 상호 전환이 불가능함. 즉, 자발적 상쇄 배출권은 의무제 이행에 사용할 수 없음.

CCTS는 단순히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산업계의 행동 변화와 탄소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정책적 실험 성격이 강함. 인도 정부는 CCTS를 통해 기후 자원 확보와 함께, 글로벌 탄소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음.

인도는 매년 1,7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정 수요가 예상됨.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수요는 15배, 2050년까지는 1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음. 탄소시장 규모는 2030년 500억 달러, 2050년에는 1~1.5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도는 이 중 20%를 차지할 수 있는 유망한 공급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CCTS의 의무제도에는 9개 산업 부문만 포함되었으며, 전체 배출의 45%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특히 석탄 화력)과 중소기업(MSMEs)은 제외되었음. MSME는 경쟁력 저하 우려로 빠졌으며, 전력 부문은 2032년까지 80GW 이상의 석탄 발전소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배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

FY26 기준으로 약 800개 기업에 배출강도 기준이 부여될 예정임. 배출권은 회계연도 종료 후 46개월 내에 발급되며,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될 예정임. 자발적 상쇄 시장은 2025년 말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글로벌 평균 탄소가격은 톤당 8~10달러, EU ETS는 60~70유로 수준임. 인도 정부는 탄소 가격 급락에 대비해, '시장 안정 기금(MSR)'을 도입할 계획임. 이는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포함되었음.

기존의 PAT(에너지 효율 제도)* 적용 대상 13개 산업 중 9개가 CCTS로 전환되었음. PAT와 CCTS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 산업은 하나의 제도에만 포함됨. RPO 제도(전력회사는 일정비율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는 효과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이 낮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제약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전력회사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싼 인증서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석탄 발전소가 많이 운영되게 되고, 친환경 전기로의 전환도 지연됨.

*에너지를 얼마나 아껴 썼는지를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벌점을 주는 제도

디디 국장은 배출권 가격과 산업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감축 목표와 비용을 산정했다고 함. CCTS는 실행과 운영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고려도 포함된 제도임.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U의 탄소배출권 제도도 정착에 수십 년이 걸렸음. 인도의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이 맑은 공기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함.

자료원: 'BREATHING ROOM' BS(3.21)

③ 시장트렌드

① 2025년 인도정부, 통관제도 완화 및 실질관세 인하 [\[상세보기\]](#)

- 인도 정부, 2025-26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 36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하, 2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상

② 2025-26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상세보기\]](#)

- 116억 달러 규모 소득세 감면, 중산층 소비 진작에 방점
- 원자재·자본재·부품 관세 인하하여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

③ 인도 공기 청향제(air fresheners) 시장의 성장과 기회 [\[상세보기\]](#)

- 2024년 기준 3.6억 달러 규모, 탈취뿐 아니라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에 관심 높아
- 한-인도 간 CEPA제도 활용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④ 에너지 공급망의 新 중심국, 인도 [\[상세보기\]](#)

- 2030년까지 450GW 재생 에너지 용량 달성 목표
- 폐기물 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등 신규 트렌드 등장

⑤ 인도 원자력 발전 시장에 나타나는 개방의 움직임 [\[상세보기\]](#)

-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인도 당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
- 발전량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여지 증대

⑥ 인도 침전 실리카 산업 현황 및 기회요인 [\[상세보기\]](#)

- 건축,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서 침전 실리카 수요 증가
- 인도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침전 실리카 시장 활성화
- 우리 기업의 인도 원자재 공급망 활용 및 협력가능성 확대

⑦ 세계 최대의 의약품 공급국, 인도 제약 시장 [\[상세보기\]](#)

- 연 평균 9% 성장하는 세계 최대의 의약품 공급국, 트럼프 관세에 불확실성 높으나, 견조한 성장률 예상

⑧ 14억 인구, 28개 주를 잇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상세보기\]](#)

- 2선, 3선 도시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UPI, COD 등 다양한 결제 방법 제공

⑨ 디지털과 프리미엄화의 물결, 인도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상세보기\]](#)

-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커머스 시장 가속화

⑩ 삼륜차에서 구급차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이 움직인다 [\[상세보기\]](#)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형 추진책 PM E-Drive
- 충전 인프라 확대 향한 印 의지... 현지 생산 및 협력 통해 韓 기업 기회 찾아야

4 주요 경제지표

① 對인도 국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2-23 (4월-3월)	2023-24 (4월-3월)	2024-25 (4월-12월)	누계투자액 (2000.4월-2024.12월)	비중
1	모리셔스	6,134	7,970	6,964	178,810	25%
2	싱가포르	17,203	11,774	11,979	171,922	24%
3	미국	6,044	4,998	3,738	68,932	10%
4	네덜란드	2,498	4,924	4,070	52,753	7%
5	일본	1,798	3,177	1,365	43,283	6%
6	영국	1,738	1,216	564	35,656	5%
7	UAE	3,353	2,924	4,145	22,647	3%
8	케이먼제도	772	342	296	15,562	2%
9	독일	547	505	326	14,969	2%
10	사이프러스	1,277	806	1,182	14,632	2%
-	기타	4,670	5,787	6,043	100,370	14%
합계		46,034	44,423	40,672	719,536	100%

*자료원: DPIIT

② 對인도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분야	2022-23 (4월-3월)	2023-24 (4월-3월)	2024-25 (4월-12월)	누계투자액 (2000.4월-2024.12월)	비중
1	서비스*주1	8,707	6,640	7,227	116,723	16%
2	컴퓨터 SW&HW	9,394	7,973	5,519	108,403	15%
3	무역	4,792	3,865	3,335	46,731	6%
4	통신	713	282	710	40,036	6%
5	자동차	1,902	1,524	1,250	37,518	5%
6	건설활동(인프라)	1,703	4,232	1,797	35,715	5%
7	건설개발*주2	146	255	283	26,894	4%
8	제약	2,058	1,064	800	23,328	3%
9	화학(비료제외)	1,850	844	802	22,949	3%
10	신재생 에너지	2,500	3,764	3,448	21,335	3%
-	기타	14,071	16,043	15,501	239,904	34%
합계		46,034	44,423	40,672	719,536	100%

*주1: Financial, Banking, Insurance, Non-Financial / Business, Outsourcing, R&D, Courier, Tech. Testing and Analysis 등

*주2: Townships, housing, built-up infrastructure 등

*자료원: DPIIT

③ 인도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출	395,425	453,291	431,477	442,842
수입	572,909	720,179	670,304	717,132
수지	-177,484	-266,888	-238,827	-274,29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④ 인도 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2024
1	미국	71,184	80,009	75,673	80,788
2	UAE	25,380	31,348	33,019	37,806
3	네덜란드	10,225	18,558	23,118	24,843
4	싱가포르	10,630	11,810	12,039	15,902
5	중국	23,044	15,151	16,237	15,145
6	영국	10,373	11,226	12,428	14,301
7	사우디	8,224	10,048	10,837	12,292
8	방글라데시	14,724	13,980	11,244	11,484
9	독일	9,512	10,463	9,669	10,418
10	이탈리아	7,703	8,596	8,406	8,473
-	기타	206,136	242,461	219,191	211,390
총계		395,425	453,291	431,477	442,84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⑤ 인도 품목별^{HS2단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
1	27	광물연료	56,145	98,086	89,304	75,910
2	85	전기기기/ 부품	18,826	26,471	32,325	40,175
3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24,180	27,511	29,312	32,529
4	71	보석류	38,211	39,353	33,430	29,934
5	30	의약품	19,463	19,758	21,302	23,370
6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18,898	21,258	20,824	22,108
7	29	유기화학품	21,174	21,838	19,390	21,027
8	10	곡물	12,472	14,147	11,295	12,110
9	72	철강	21,201	15,374	11,828	10,356
10	73	철강제품	8,363	9,906	9,745	10,093
-	-	기타	156,492	159,589	152,722	165,230
총계			395,425	453,291	431,477	442,84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⑥ 인도 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2024
1	중국	87,478	102,427	99,624	109,383
2	러시아	8,251	34,015	60,612	65,966
3	UAE	43,027	52,673	45,494	61,031
4	미국	41,310	51,326	43,174	43,627
5	사우디	27,280	43,323	33,648	31,164
6	이라크	26,204	37,228	29,200	30,392
7	스위스	29,506	16,297	19,661	25,173
8	인도네시아	16,718	28,495	22,641	23,835
9	한국	17,069	20,696	21,367	20,946
10	싱가포르	18,090	24,313	21,527	20,556
-	기타	257,976	309,386	273,356	285,059
총계		572,909	720,179	670,304	717,13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⑦ 인도 품목별^{HS2단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
1	27	광물연료	169,072	260,325	220,653	226,268
2	71	보석류	88,275	78,111	72,599	90,518
3	85	전기기기/ 부품	56,668	69,835	76,067	85,232
4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48,470	54,770	57,067	61,863
5	29	유기화학품	27,213	29,831	27,268	26,111
6	39	플라스틱/제품	19,242	22,734	22,592	22,015
7	72	철강	11,670	16,656	18,911	17,695
8	15	동식물 오일/왁스	17,462	21,399	16,567	17,010
9	90	광학/ 의료기기 등	11,210	11,322	12,626	13,760
10	88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5,075	8,560	8,163	12,707
-	-	기타	118,552	146,636	137,791	143,953
총계			572,909	720,179	670,304	717,13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⑧ 한-인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2	2023	2024	2025.2월 누계
對인도 수출	18,870	17,950	18,696	3,058
수입	8,897	6,728	6,431	1,074
수지	9,973	11,222	12,265	1,984

*자료원: KITA

⑨ 한국의 對인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2	2023	2024	2025.2월 누계
1	85	전기기기/부품	4,342	3,996	4,690	930
2	72	철강	2,698	2,597	2,526	358
3	39	플라스틱/제품	2,016	2,161	2,154	338
4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1,960	1,938	2,220	316
5	29	유기화학품	1,047	1,235	1,250	167
6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936	1,003	680	152
7	27	광물연료	1,159	1,161	1,235	148
8	90	광학/의료기기 등	564	620	728	138
9	40	고무/제품	344	312	373	66
10	76	알루미늄/제품	217	176	210	57
-	-	기타	3,437	2,482	2,630	388
총계			18,870	17,950	18,696	3,058

*자료원: KITA

⑩ 한국의 對인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2	2023	2024	2025.2월 누계
1	27	광물연료	2,681	1,657	1,473	257
2	29	유기화학품	778	774	843	166
3	76	알루미늄/제품	1,614	896	637	84
4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313	309	312	66
5	72	철강	410	447	454	58
6	78	납/제품	262	250	235	50
7	85	전기기기/부품	200	198	266	37
8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149	172	170	28
9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95	100	131	26
10	74	동/제품	33	37	57	23
-	-	기타	2,362	1,888	1,853	279
총계			8,897	6,728	6,431	1,074

*자료원: KITA

11 기타 경제지표

GDP 성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9.7%	7.0%	7.8%	7%(e)	6.5%(e)
기본금리	2022.9.30 이후	2022.12.17 이후	2023.2.8 이후	2025.2.7 이후	-
	5.90%	6.25%	6.50%	6.25%	-
산업생산	2024.9월	10월	11월	12월	2025.1월
	3.1%	3.5%	5.2%	3.5%	5%
PMI지수	2024.10월	11월	12월	2025.1월	2월
	59.1	59.5	59.2	57.7	56.3
도매물가 상승률	2024.10월	11월	12월	2025.1월	2월
	2.36%	1.89%	2.37%	2.31%	2.38%
소매물가 상승률	2024.10월	11월	12월	2025.1월	2월
	6.21%	5.48%	5.22%	4.31%	3.61%
환율 (월평균)	2024.11월	12월	2025.1월	2월	3월 ^(3.26기준)
	84.354	84.973	86.249	87.022	86.636

*자료원: IMF(GDP성장률), RBI(기본금리, 소매물가상승률),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산업생산), PMI India, the Commerce Ministry(도매물가상승률), Investing.com(월평균 환율)
<끝>